

議政白書

(別冊附錄)

第7代 前半期



忠清北道議會



일 러 두 기

- 이 백서(별책부록)는 제7대 충청북도의회의 개원이후 전반기 (2002년 7월 9일~2004년 6월 30일)동안의 특별위원회별 의정활동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이번 백서(별책부록)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편집한 내용을 위주로 편성하였음
- 제1절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활동상황, 특별위원회 활동성과,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참고자료 순으로 정리하였고
- 제2절은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편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현황,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활동상황, 주요성과와 기대효과, 참고자료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 제3절은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그 동안 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 참고자료 순으로 정리하였고
- 제4절은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그 동안 추진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정리하였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정 상 혁 위원장



이 범 윤 간사



한 창 동 위원



강 구 성 위원



유 동 찬 위원



장 준 호 위원



조 영 재 위원



김 환 동 위원



이 광 중 위원



▶ 댐특위 간담회 및 업무보고 청취(02. 10. 7)



▶ 대전시 동구청 방문 댐주변지역 시책 청취(02. 10. 8)

사진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활동



▶ 한국수자원공사 및 현장방문 현황 청취(02. 10 .7)

사진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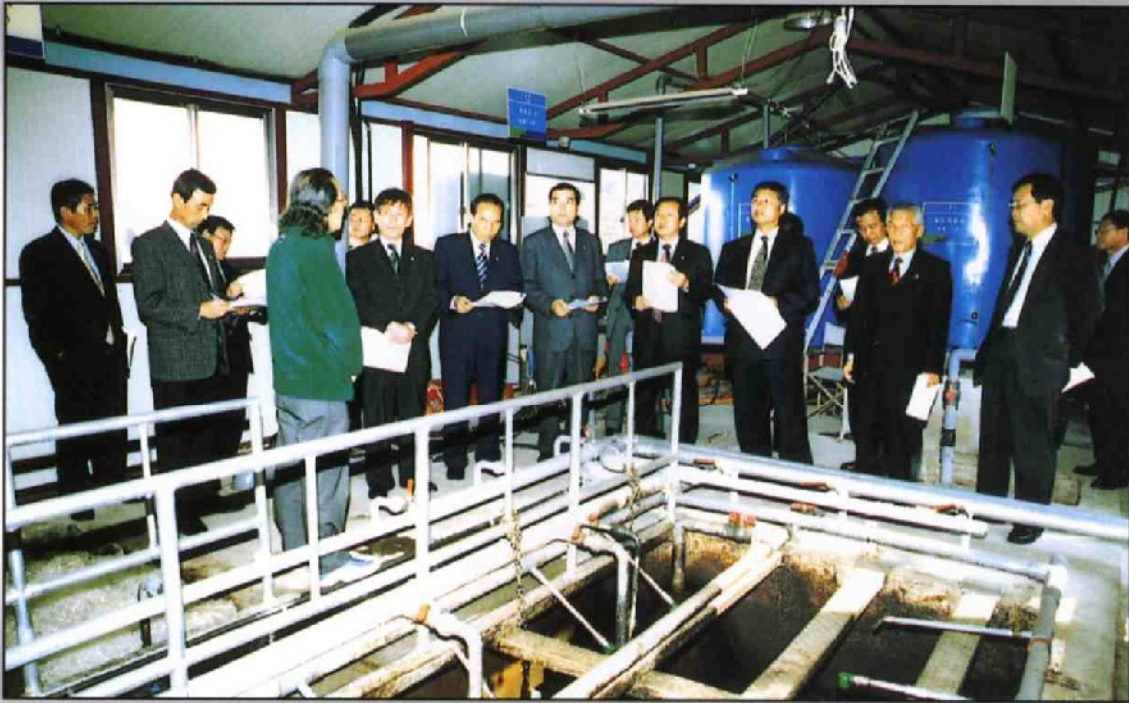


▶ 충주댐관리단 방문 현황 청취(02. 1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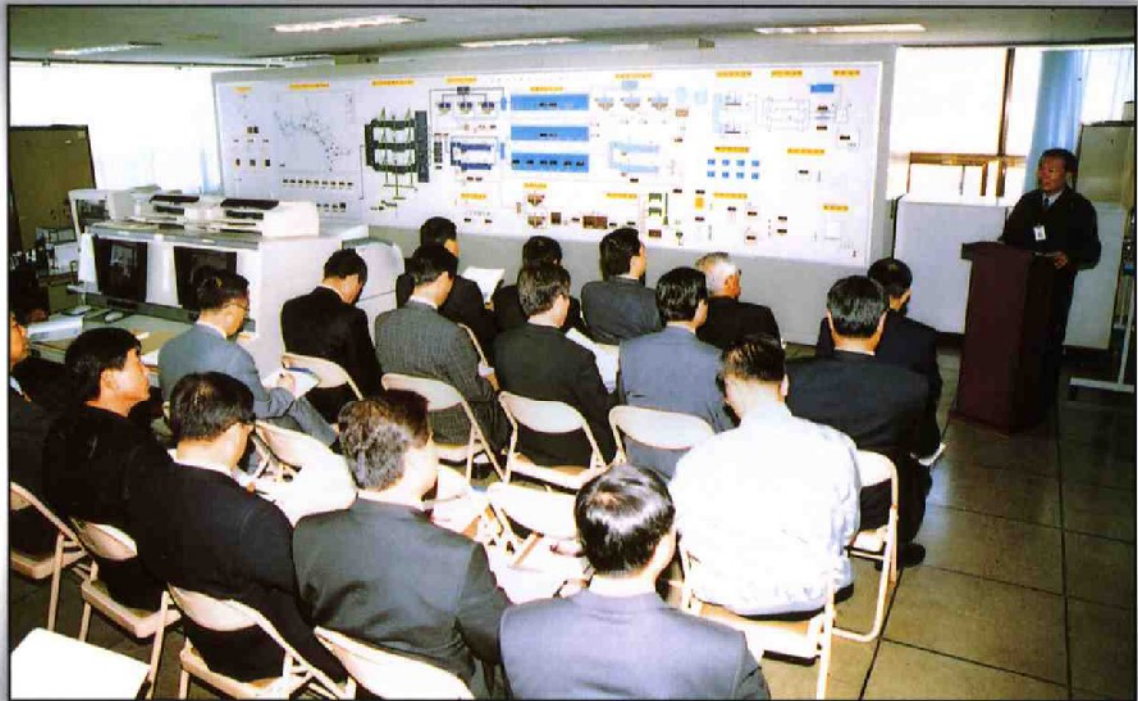


▶ 댐관련 도정질문(정상혁 위원장) 및
달천댐 건설반대 5분 자유발언(김환동 의원) (02. 10. 14 / 11. 6)

사진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활동



▶ 경기도 양평군 축산폐수 숙성처리시설 방문 현황 청취(03. 2. 26)



▶ 울산공단 환경보전협의회 방문 현황 청취(03. 2. 27)



▶ 여수산업단지환경협의회 방문 현황 청취 (03. 2. 28)

사진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활동



▶ 대청댐 물관리와 주변지역 발전방향 심포지엄 (03. 6. 27 / 옥천군청 대회의실)



▶ 충주댐 주변지역 발전방안심포지엄(03. 9. 29 / 제천시청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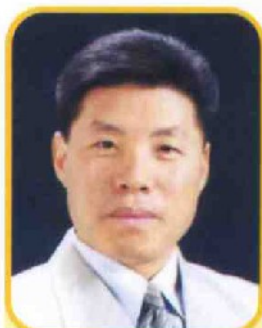


▶ 댐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04. 6. 14 / 충북도청 대회의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김 정 복 위원장



강 우 신 간사



박 재 국 위원



박 중 갑 위원



강 구 성 위원



최 재 옥 위원



송 은 섭 위원



이 기 동 위원



조 계 숙 위원



정 윤 숙 위원

사진으로 보는 특별위원회 활동



▶ 2003. 4. 16 범도민협의회와 간담회



▶ 2003. 5. 30 행정수도이전지원 충청권광역의회의회 창립총회



▶ 2003. 6. 23 행정수도건설추진 범 충청북인 결의대회 참석(서울코엑스컨벤션센터)



▶ 2003. 7. 22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참석(신행정수도기획단)



▶ 2003. 9. 15 충청권 국회의원초청 간담회 개최(광역의회 3차협의회)



▶ 2003. 11. 11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특별대책위원회” 제4차 간담회 개최



▶ 2003. 11. 18 지방살리기 3대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서울 여의도공원)



▶ 2003. 11. 22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구성안” 부결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권영관 도의회의장, 박재국·장준호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김정복 특위위원장, 강우신 간사, 청주권의원 등)



▶ 2003. 11. 22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성명서 발표



▶ 2003. 11. 25 충청권광역의회 제3차 실행위원회 개최 및 규탄 식발 결의식
(왼쪽부터 김정복 충북특위위원장, 홍표근 충남특위간사 강구성의원 규탄협서)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김 정 복 위원장



조 계 숙 간사



오 장 세 위원



이 대 원 위원



박 재 국 위원



심 홍 섭 위원



박 종 갑 위원



강 구 성 위원



이 필 용 위원



강 우 신 위원



정 윤 숙 위원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위원



김 정 복 위원장



강 우 신 간사



박 재 국 위원



박 중 갑 위원



강 구 성 위원



최 재 옥 위원



송 은 섭 위원



이 기 동 위원



조 계 숙 위원



정 윤 숙 위원



▶ 2004. 4. 26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특위” 제1차회의



▶ 2004. 6. 18 공공기관유치관련 간담회



▶ 특별위원회구성 (2002. 9. 9)



▶ 집행부(교통과)와 간담회(2002. 10. 8)



▶ 오송역 유치역 유치를 위한 대 토론회 (2002. 10. 26)



▶ 강원도의회와의 공조 추진대회(2002. 11. 13)



▶ 공청회 대응전략 논의(2003. 7. 4)



▶ 우리도 강력 항의로 공청회 무산(2003. 7. 4) 이를 계기로 건설교통부에서 공식사과

목 차

제 1 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3
1.	특별위원회 구성	5
2.	주요활동상황	7
3.	특별위원회 활동성과	10
4.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11
5.	참고자료	19
제 2 절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69
1.	신행정수도건설추진현황	71
2.	특별위원회 구성	71
3.	주요활동상황	72
4.	주요성과와 기대효과	80
5.	참고자료	81
제 3 절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103
1.	특별위원회 구성	105
2.	그 동안 추진사항	105
3.	향후추진계획	106
4.	참고자료	106
제 4 절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설치특별위원회	113
1.	특별위원회 구성	115
2.	그 동안 추진사항	116
3.	참고자료	117

제1절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 구성
2. 주요활동 상황
3. 특별위원회 활동성과
4.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5. 참고자료

제1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배경

충청북도내에는 1980.12. 2에 완공된 국내 댐규모로 제3위인 총저수용량 14억 9천만톤의 대청댐과 1985.12.20에 완공된 국내 제2위의 총저수용량 27억 5천만톤의 충주댐이 있다.

이 2개의 댐건설로 금강과 한강유역의 홍수조절을 할 수 있어 매년 되풀이되던 수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고 또 공업과 농업용수로 산업, 생산활동에 이용되어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특히, 금강유역 250만명과 한강유역 2,240만명의 상수원으로 오늘날 이 2개댐의 기능과 가치는 더 없이 귀중한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 댐건설로 상류지역에 살고있는 대청댐유역 30여만명과 충주댐 유역 40여만명의 주민들은 착공당시 이지역을 관광지로 개발 조성하겠다고 정부 약속은 오간데 없고 대신 댐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취급, 2중 3중의 규제법을 제정하여 생업에 제약과 생활에 불편을 강요당하여 왔다.

따라서, 주민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 인구는 급감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평, 불만은 높아졌고 댐수질 개선에 방관자로 변하게 되었다.

최근 댐물을 이용하는 수혜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그 부담금으로 규제 지역에 각종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나마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댐주변지역을 직접 규제하는 법은 3가지가 있는데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의한 수변구역지정 등이다.

이 가운데 댐상류지역을 강도 높게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이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1999. 2. 8 제정되어 1999. 8. 8부터 시행되었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은 2002. 1.14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3개법에 의거한 충청도내 규제지역은 대청댐유역 4개군 18개 읍·면 282개리이고, 충주댐유역 3개시·군 12개 읍·면 28개리 등 합계 7개시·군 30개읍·면 320개리인데 이 법시행 이후 강화된 규제와 각종사업의 지원상에 문제는 없는가?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댐 상·하류지역 주민간의 갈등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는 왜 말이 없는가?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댐은 여러 시·군에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의 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특히, 2개의 댐이 있는 우리 충청북도는 도정발전을 논함에 있어 이 댐 문제를 도외시킬 수 없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가 댐과 관련된 여러문제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충청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댐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나. 구성개요

○ 구성일자 : 2002. 9. 9 (204회 정례회)

○ 구성일원 : 10명

- 위원장 : 정상혁 의원 - 간사 : 이범윤 의원

- 위 원 : 한창동 의원, 강구성 의원, 유동찬 의원, 장준호 의원, 조영재 의원, 김환동 의원, 이광중 의원

○ 활동기간 : 2002. 9. 9 ~ 2004. 6. 30

※ 관련자료 : 「별지 1」, 「별지 2」

2. 주요활동상황

그동안 주요활동을 연도별로 요약해 보면

가. 2002년도 활동

○ 2002. 10 도내 댐규제지역 현지를 방문, 애로와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인접한 대전시 동구의 규제지역을 방문하여 대전시가 막대한 투자를 하여 규제지역 주민의 생업에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실태를 시찰할 수 있었다.

○ 2002. 10 댐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청댐관리단, 충주댐관리단을 방문하여 물관리상황을 청취하고 지금까지 규제지역 주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주민불편 등 민원에 피동적이었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2중 3중의 규제로 낙후되고 있는 댐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증액을 통한 지원 확대에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 2002. 10 팔당댐 주변 규제지역으로 여러 악조건을 극복하고 친환경 농업과 축산폐수 숙성사업 등 성공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을 방문, 시찰하였다.

○ 2002. 10 정부의 달천댐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괴산군의회를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 본 결과 괴산군민들의 달천댐 반대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본회의에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각 정당, 정부 관계부처 등에 건의하였다.

나. 2003년도 활동

○ 2003. 2 댐주변지역의 기상재해(안개, 과습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문제를 파악하고자 울산공단과 여수공단의 환경보전 협의

회를 방문하여 공해(대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 및 보상 상황을 청취하고 공해방지시설을 시찰하였다.

○ 대청댐 건설이후 25년만에 충주댐은 20년만에 규제지역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 학계, 지방의원, 지방환경청, 도·시·군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댐주변지역발전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 2003. 6. 27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청댐과 9. 29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주댐의 당면현안과 주변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 댐상류수질오염실태 및 관리대책
- 댐물관리와 주변지역지원
- 댐주변지역 규제와 지원의 문제
- 인공호수 주변지역의 기후변화와 농작물생육에 미친 영향
- 댐주변 지역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2차에 걸친 심포지엄은 주민들의 다수참여로 시종일관 열기에 찬 가운데 진행되었고 다양한 건의가 제기되었다. 한마디로 규제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읽을 수 있었고 그동안 얼마나 소외되어 왔는가?를 짐작하게 하였다. 즉, 규제법을 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길만이 댐의 수질오염을 줄이는게 아니라 규제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어 안정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정화비용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하는 기회였다.

댐관계자들의 상호간 진솔한 대화와 공동노력 없이는 댐의수질오염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 2003. 10 한국수자원공사는 112억원을 들여서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사업내용은 대청댐 수변구역의 99.1%를 차지하고 있는 충청북도 지역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전시에 설치하는 계획이었다. 본 댐특위는 수차 한국수

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댐특위는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건의문을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정부, 국회, 정당, 수자원공사 등 관계 요로에 보냈던 바 한국수자원공사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다.

다. 2004년도 활동

○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기본계획 추진을 유보하고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용역을 맡기게 되었다. 본 특위에서는 2004. 2 충북대 용역팀을 방문하여 청원, 보은, 옥천, 영동군의 희망사업을 용역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 2004. 4. 3 본 용역에 대한 중간검토 세미나에 참석하여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2003년도 충북도 예산에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도내 댐규제지역의 농업과 관광 등 발전전략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립중에 있어 금년내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크다.

○ 2004. 6. 14 댐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심포지엄은 본특위가 지난 2년간 댐과 관련한 다각적인 활동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주변지역 환경정비계획(대청댐), 금강·한강수계특별법의 문제점, 댐유역공동체 구축방안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특히 이 심포지엄에는 본회의의원, 관계공무원, 사회단체, 유관기관 외에 대전시 대덕구의회, 강원도 춘천시의회, 전라북도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의회, 전라남도 순천시, 보성군의회, 경북도 영천시, 영양군, 청송군, 청도군의회, 경상남도 양산시, 진주시의회, 충청북도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단양군의회 등 전국의 댐주변지역 7개 시도 19개 기초의회 의원 51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광역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이처럼 전국 각 시·도의 기초 의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적이 없다며 충청북도의회가 댐특위활동을 통하여 전국의 댐규제지역 공통

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므로서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3. 특별위원회 활동성과

○ 충청북도의회가 대청댐 완공 25년만에, 충주댐 완공 20년만에 전국 광역의회 역사상 최초로 댐과 관련있는 지방환경청, 광역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규제지역주민, 학계, 의회 등 관계자들이 댐으로 인한 공동관심사를 함께 논의 해결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 한국수자원공사를 수차 방문하여 지금까지 댐상류지역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간에 두껍게 막혀있던 불신의 벽을 허물게 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규제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자진 참여하도록 변화를 하게 하였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년까지 댐의 발전판매수익금의 2%와 용수판매수익금 10% 출연 규정의 상향조정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하여 2003. 1월부터 발전판매수익금의 3%로 인상하였고 2005. 1. 1부터는 발전판매수익금의 6%로 용수판매수익금은 20%로 인상되게 하였다. 대청댐은 현재 연간 9억 5천만원에서 19억원으로 충주댐은 26억원에서 52억원으로 인상되어 두개 댐의 주변 지역에 연간 35억 5천만원이 증액 지원하게 하였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댐주변 환경정비사업을 대전시 지역에 편중 추진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게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합리적인 연구 검토를 하게 함으로서 우선 대청댐부터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전국 댐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 전국의 댐주변 규제지역 주민과 정부기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또 상하류 지역주민간의 갈등 등 댐주변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의회가 나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 지난 14일 개최한 3차 심포지엄에 전국 7개시도 19개 기초단체 의회의원들이 광역의회 사상 유례가 없는 51명이나 참석한 것은 충청북도의회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인 동시에 광역의회의 활

동영역 개발 및 확대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 지금까지 산재된 채 방치될 뻔 하였던 대청댐과 충주댐 관련 각종자료를 연도별로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집대성함으로써 후일 기록으로 남겨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댐주변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였고 각종 규제 관련법의 문제점 검토로 개정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종합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댐 상·하류 지역 주민간의 이해를 넓히고 공동체적 상생하는 화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하였다.

○ 도내 댐주변 규제지역 지원을 소홀히 하여온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2003년과 금년에 각각 연간 12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아직은 너무나 미미한 지원이지만 향후 상류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하류 물이용 주민들의 오염되지 않은 물 공급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상류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질오염방지를 촉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4.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가. 2002년도 활동내용

① 댐관련 자료요구

- 요 구 일 : 2002. 9. 25
- 요 구 자 : 정상혁 위원장
- 요 구 처 : 물관리과, 안전관리과, 환경과
- 요구내용 : 댐관련 예산지원사항, 댐주변지역 규제내용, 댐주변지역 지원대책 및 현황, 제도개선 및 문제점 등

② 댐특위 간담회 개최

- 2002. 10. 7 : 댐관련 요구자료 보고 및 질문·답변
- 2002. 11.20 : 댐관련 예산 및 현안사항 협의

③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제205회 임시회 (2002. 10. 14)

- 김환동의원(달천댐 건설관련) ※ 관련자료: 『별지 3』

○ 도정질문 : 제206회 임시회(2002. 11. 6)

- 정상혁위원장(댐주변지역 피해관련)

※ 관련자료: 『별지 4』

④ 달천댐 건설반대 건의문 채택

○ 제205회 임시회 본회의 (2002. 10. 23)

○ 건의문 주요내용

- 달천댐 건설계획 즉각 철회

- 달천댐 건설사업비 예산전액 삭감

- 댐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 관련자료: 『별지 5』

⑤ 댐관련 기관 및 현장방문

○ 제1차 (2002. 10. 7)

-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대전광역시
동구청,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현장

- 방 문 자 : 댐특위위원,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업무관련과장 등

- 방문내용 : 댐주변지역 시책 및 지원계획 청취, 지역주
민들의 불편해소 및 지원, 지역발전 참여
촉구, 주민애로사항 청취 등

○ 제2차 (2002. 10. 8)

- 대상기관 : 충주댐관리단

- 방 문 자 : 댐특위위원, 도 관계관, 충주.단양군 관계관

- 방문내용 : 관리단 사업내용 및 주변지역 애로사항 청취

○ 제3차 (2002. 10. 9)

- 대상기관 : 경기도 양평군 환경관리사업소, BMW공장,
화전리 오리농장, 무왕쓰레기 매립장

- 방 문 자 : 댐특위위원, 도 환경 및 하천업무 관계관

- 방문내용 : 환경 및 수질보전실태 견학 등

나. 2003년도 활동내용

① 댐관련대책 특별위원 간담회

- 2003. 1. 14 (화) 15:30
- 주요내용
 - 2002 댐특위 활동실적 보고
 - 2003 댐특위 활동사업비 보고
 - 2003 댐특위 활동계획 및 방향 협의

② 댐관련 선진지 현장방문 및 시찰

- 기 간 : 2003. 2. 26 ~ 2. 28
- 지 역 : 울산, 여수
- 참 석 : 15명(의원, 관련 실·국 담당관, 사무처직원 등)
- 방문시설 : 기초환경처리시설
- 방문내용
 - 환경오염방지시설 견학
 - 공단지역 공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조사, 보상제도 파악

③ 한국수자원공사 방문 업무협의

- 일 시 : 2003. 3. 17(월) 15:00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 소재)
- 방 문 자 : 댐특위위원장, 안전관리과장, 하천계획담당
의회운영담당 등
- 방문내용 : 댐주변지역 피해조사 용역 및 당면업무 협의
 - 댐주변지역 피해조사 용역 공동발주
 - 용역기간 : 3년 이상 장기 조사필요
 - 용역대상 : 쌀, 과수, 콩 등 농작물
 - ※ 4월중 충청북도와 수자원공사 협조 용역발주 추진요청
 - 댐주변지역 주민과의 세미나 개최
 - 개최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개최장소 : 옥천(대청댐), 충주(충주댐)

④ 대청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2003. 6. 27(금) 13:00 ~ 19:00
- 장 소 : 옥천군청 대회의실
- 참 석 : 300여명 (의원, 관계관, 주민 등)
- 주제발표 (주제발표 5명, 토론 8명)
 - 대청댐상류 수질오염 실태(금강유역환경청 김성동 국장)
 - 대청댐 물관리와 주변지역 지원(한국수자원공사 박성순 부장)
 - 대청댐 주변지역 규제와 지원의 문제
(충북도의회담특위 정상혁 위원장)
 - 인공호수 주변지역의 기후가 농작물생육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윤진일 교수)
 - 대청댐주변지역 개발방향 (청주대학교 박종호 교수)

⑤ 충주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2003. 9. 29(월) 13:00 ~ 18:30
- 장 소 : 제천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250여명 (의원, 관계관, 주민 등)
- 주제발표 (주제발표 3명, 토론 10명)
 - 충주댐 물관리 및 오염실태
(한국수자원공사 이상태 부장)
 - 충주댐 주변지역 규제와 지원문제
(충북도의회 담특위 정상혁 위원장)
 - 충주댐 주변지역의 발전방향(충주대 조용진 교수)

⑥ “대청댐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제검토 건의

- 2003. 10. 23 담특위간담회에서 결의
-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 채택
- 건의문 주요내용
 -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 정비사업” 계획을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 건의

- 10. 24 건의(안) 채택 건의문 발송
 ⇒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국회건설교통위원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건교부, 환경부장관, 한국
 수자원공사사장

※ 관련자료 : 『별지 6』

⑦ 댐주변지역 조사 용역사업 추진

- 용역기간 : 2003. 12. 29 ~ 2004. 12. 28(12개월)
- 담당부서 :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 용역기관 : 충북개발연구원(원장 이태일)
- 사업비 : 2억원 (과목 : 치수 및 재난관리)
- 용역과제
 - 당초 : 댐주변지역 농작물등 피해조사 용역
 - 변경 : 댐주변지역의 개발 발전 전략 용역

⑧ 한국수자원공사 방문 부사장 면담

- 일 시 : 2003. 12. 30(화) 16:00
- 장 소 : 수자원공사 부사장실 (대전소재)
- 방 문 자 : 정상혁위원장 외 전문위원실 직원 2명
- 내용협의
 -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지원 건의
 - 댐주변지역 지원관련 법령 개정 추진 협조

다. 2004년도 활동내용

① 대청댐주변지역 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 일 시 : 2004. 2. 3(화) 14:00
- 장 소 :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이만형 교수)
- 방 문 자 : 정상혁위원장 외 전문위원실 직원 2명
- 내용협의
 - 청원군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외 2건
 - 보은군 매곡산성, 호점산성 개발사업 2건
 - 옥천군 수상레저타운조성 1건
 - 영동군 옥계리 과일랜드조성 1건

② 대청댐주변지역 환경정비전략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04. 4. 3(토) 14:00
- 장 소 : 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
- 지정토론자 : 정상혁위원장
- 주 제
 - 대청댐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 구축
 - 대청호 환경친화적 관광개발구상
 - 대청호 주변지역의 농촌개발정책과 친환경농업육성 방안
 - 대청호 수질보전 방안
 - 대청호 주변지역 환경정비전략

③ 금강유역관리 연찬회 참석

- 일 시 : 2004. 4. 27 ~ 4. 28
- 장 소 : 충남 보령시 한화리조트
- 참 석 : 9명(의원 1, 공무원 7)
- 내 용
 - 유역관리 시스템 이해
 - 외국에서의 수질오염 총량제의 현황
 - 환경문제에 얽힌 갈등과 주민지원
 -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이해

④ 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2004. 6. 14(월) 13:00~18:00
- 장 소 : 충북도청 대회의실
- 참 석 : 200명(의원, 관계관, 주민 등)
- 주제발표(주제발표 3명, 토론 5명)
 - 댐 주변지역 환경정비계획(한국수자원공사 박성순 부장)
 - 금강·한강수계특별법의 문제점
(충북도의회 댐특위 정상혁 위원장)
 - 댐유역공동체 구축방안(충주대학교 조용진 교수)

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

- 일 시 : 2004. 6. 25(금) 11:00
-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5층)
- 참 석 : 댐특별위원회위원 9명
- 안 건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

5. 참고자료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별지 1)
- 댐특위 구성관련자료(별지 2)
- 5분 자유발언 내용(별지 3)
- 댐관련 도정질문 및 답변내용(별지 4)
- 달천댐건설 반대건의 관련자료(별지 5)
- 대청댐 주변지역환경정비사업 관련 건의문(별지 6)
- 댐관련 신문보도내용(별지 7)

별지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별지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2002. 9. 9 제204회 정례회에서 10명의 의원으로 제7대 충청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약 1년 10개월간 많은 활동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오는 6월말로 그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가 활동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도와 시·군관계공무원, 규제지역주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도내 및 타 시·도 댐주변지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님들, 도내 대학관련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댐특위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왕성하게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는 15개의 다목적댐이 건설되어 있는데 이 댐주변 지역은 대부분이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 규제에 묶여 생업의 제약과 생활불편 등으로 지역은 낙후되었고 주민들은 절망속에 불평, 불만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관계부처,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마찰이 계속되고 댐 상·하류 지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등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청북도 의회 댐특위가 직시하고 전국 광역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댐과 연관 있는 정부,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학계, 사회단체 등이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동관심사를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조정자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서 나름대로 긍정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충청도정발전을 위해서나 전국의 댐주변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모범사례로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에 규제지역 주민들에게 달려가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도 요청 하고, 또 학계 전문가 의견도 경청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지자체를 설득하고 요청하는 등 때로는 조정자로 나서서 관계자들 모두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여 여러대안을 도출해 내는 등 부단한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댐주변지역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그동안 응어리진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여러 현안에 깊숙이 들어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대안을 제시하는 기초터전을 마련한 단계에 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댐주변지역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계기관 단체가 댐주변 규제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또 규제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대청댐 충주댐이 오늘날 충북발전을 가로막는 애물단지이지만 미래에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경관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충청북도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보물단지가 되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2004. 6. 25

충청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상 혁

별지 2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관련자료

【별지 2】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23
----------	----

제안연월일 : 2002. 9.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댐과 관련한 충청북도의 제반현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댐주변 주민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안이유

- 대청댐과 충주댐 등의 건설로 수도권과 충청 및 호남권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가 물 관리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 댐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에 의한 개발억제로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생계유지가 곤란하므로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 자치단체간 용수 및 물 이용금의 배분경쟁, 댐 수질보호 및 개선 등 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 특별위원회 구성

- 명 칭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13명 이내
- 위원선임 : 의장에 일임
-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일로부터 2004년 6월말까지

□ 특별위원회 기능

- 댐 주변지역 개발대책 및 주민의견 수렴
-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과 중앙 정부에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댐 수질보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대책 추진
- 댐 주변 자연생태계 등 관련 대책
-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국가부담을 위한 수도법 등 댐 관련법 개정

별지 3

5분 자유발언 내용

【별지 3】

5분 자유발언 내용

□ 발언자 : 김환동 의원

괴산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이원중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사회단체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 !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에 달천댐 건설을 위한 설계비 계상과 관련하여 또다시 달천댐을 건설하려는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달천댐 건설계획이 1999년도 하반기에 언론보도가 된 후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따라 당시 도와 괴산군 그리고 충주환경연합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질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달천댐개발 가능입지 등을 조사하였으나 건설계획이 없다」는 회신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타당성을 조사하였으나 건설계획이 없고 향후 필요시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로부터 달천댐 건설계획이 없다는 것을 믿고 지역민 모두는 정부를 신뢰하며 국가와 지역발전에 온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사전협의 없이 내년도 예산에 달천댐 기본설계비 27억원을 계상한 것은 150만 도민을 우롱함은 물론 주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소치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주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또한 우리 충청북도의 면적은 전 국토의 7.5%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제일 작다고 할 수 있음에도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의 수몰면적은 엄청나게도 우리 도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달천댐 수몰 예상면적 2,316만㎡가 추가로 수몰된다면 가뜰이나 열악한 도세에 실면적이 줄어들어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살던 생활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은 물론이려니와 환경파괴와 잦은 안개로 인한 질병, 농작물피해 그리고 각종 사고가 증가할 것입니다.

댐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물 부족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댐을 건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차제에 정부에 촉구합니다. 드넓은 남한강유역 곳곳에 수중보를 설치하면 대형댐 못지않은 물을 보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주민은 정부의 달천댐 건설계획이 백지화가 되지 않고 유보된 것으로 보고 지역민심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면 괴산군의 존립 자체가 우려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1999년도 이 문제가 도출되었을시에 충청북도의 주도로 도내 각 시·군과 시민단체와 언론 등 전 도민이 달천댐 건설계획 완전백지화를 이끌어 냈어야 함에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괴산군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건설교통부와 국회로 달려가 달천댐 건설 관련계획과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예산심의전이라면 삭감하겠다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각서라도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지역주민의 생사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어떠한 명분이 있다 하여도 우리 지역주민은 수용할 수 없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1999년 당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댐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150만 도민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좌시하지 않고 총 단결하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 시민단체 여러분!

우리 괴산군과 충청북도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지 4

댐관련 도정질문 및 답변내용

【별지 4】

댐관련 도정질문 및 답변 내용

□ 질의자 : 정상혁 의원

보은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시는 도민여러분!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중 지사님 또한 충북 교육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김천호 교육감님!

말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댐주변 지역 피해주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80년에 준공된 대청댐과 1985년에 준공된 충주댐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리고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금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의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제한과 배출시설 설치금지로 농외소득원이 봉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축산 규제와 질은 안개로 농작물수확감소, 건강상피해, 교통사고 다발 등 이중 삼중의 막대한 직·간접피해를 받음으로써 소득은 줄고 생활은 불편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댐이 건설된 후 현재까지 댐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 자체의 특별지원시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수자원공사가 출연하는 발전수익금의 2%, 용수판매 수익금의 10% 해당금액과 댐 하류 물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으나 이 재원은 법에 배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서 시·군에 배정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댐 하류지역의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수질개선사업 등에 92%가 쓰여지고 주민지원사업비는 8%에 불과함에도 명목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댐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인접한 타 시·도의 경우 동일한 규제를 받는 댐 피해 지역에 자체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왜 고통 받는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느냐고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웃 대전시가 댐 피해지역에 환경기초시설 및 생활편익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생업제한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와 경기도가 양평군에 친환경농업을 집중 지원하여 농가소득도 올리고 한편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물이 댐에 흘러들어 가도록 한 성공사례는 우리 지역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댐 피해로 고통 받는 도민들에게 지금처럼 수자원공사 출연금과 물이용부담금에 의존하는 명목뿐인 지원만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댐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 받는 실정을 감안하여 댐 피해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시·도와 유사한 생활편익 시설과 친환경농업 등 다각적인 집중지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해서 깨끗한 물을 댐 하류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두 개의 대형 댐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도 이 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구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나 수자원공사에 공식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명분 내지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정부 공인 연구기관에 댐 피해연구조사용역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2003년도에 댐 피해 연구조사용역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이원종 도지사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정상혁 의원님께서서는 우리 도와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면서 높은 학식과 일에 대한 집념으로 농업과 환경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공헌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댐 주변지역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댐 주변지역 피해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관계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공사 출연금과 물이용 부담금에 의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즉 댐 지역에 주민지원사업과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의 지원사업 그리고 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의 세 가지입니다.

이중에서 댐 지역주민 지원사업비는 금년도에 총 19억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주민욕구에는 충분치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에 관계 법령이 개정이 돼서 대청댐과 충주댐 등 기존 댐에도 2003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연차적으로 총 600억원 규모의 댐 주변정비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수변구역 등 규제지역에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의 경우에는 그 동안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지켜오면서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일대에 일방적인 피해가 오랫동안 강요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99년부터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바꾸는데 성공했고 또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이루게 된 것은 피해만 입어오던 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의 경우 우리 충청북도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없이 최근 3년간 총 682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재원을 가지고 상류지역에 환경보전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가 몇 년 안되고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창기여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댐 규제지역의 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청원군과 옥천군에 두 개 마을을 친환경농업 거점마을로 육성할 계획이고 이미 금년도에도 친환경비료 지원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비료 지원사업비도 대폭 늘려서 댐 규제지역에는 일반지역보다 비중을 높여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댐 규제지역이 많은 남부 3개 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금년에 도비 20억원을 특별 지원했고 또 친환경농업 모델을 개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댐 지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사업과 댐 피해주민의 복지증진 및 친환경적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상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5

달천댐건설 반대건의 관련자료

【별지 5】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

의안 번호	30
----------	----

제안연월일 : 2002. 10. 23

제안자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150만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충청북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달천댐 건설계획 전면 철회.

2. 제안이유

- 기존의 대청댐, 충주댐 등 정부의 댐 관련정책은 충북도민에게 고통만 안겨 주었음
- 달천댐 건설시 24.2km²수몰 및 5000여명의 이주민 발생으로 충북도민의 고통 가중과 “괴산군”의 존립기반 붕괴우려
- 정부에서 달천댐 건설계획이 없음을 이미 발표하고서 재추진하는 것은 150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부계획을 철회 백지화하기 위함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회건설교통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우리 도내의 달천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150만 충청도민을 대표하여 분명히 반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홍수조절 및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80년 대청댐 완공
으로 충청북도 청원·보은·옥천군 등 3개군 11개 읍·면 66개 리·동에
2,652세대 17,247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하였고

'85년 충주댐 완공으로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등 3개 시·군 15개
읍·면, 114개 리·동에 7,105세대 38,663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 조
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망향의 슬픔을 간직한 채 정든 고향을 떠
나거나 일부는 댐주변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댐 건설 당시 정부는 우리 도민들에게 호반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장밋빛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댐주변 주민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오로지 하류지역의 맑은 물 공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들에게 적정
한 지원은커녕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만 강화하여 엄청난 재산권 제한과 생활의 불이익은 물론,

질은 안개와 습도 상승으로 농작물 피해와 각종 질환 그리고 빈
번한 교통사고 등으로 댐 준공 후 수 십년간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외면해 왔으며 그 실상조차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댐관련 정책은 수몰 이주민과 주변 주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2003년도 예산으로 달천댐 건설기본설계비 27억원을 국회에 심의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계획대로 달천댐을 건설한다면 24.2km²가 수몰되어 충주시·괴산군·음성군 등 약 1,000세대 5,000명 이상의 이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특히 “괴산군”은 자치단체로서의 기반이 완전 붕괴될 처지가 될 것입니다.

달천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는 대청댐 및 괴산댐, 충주댐 건설의 아픔으로 아직도 신음 중인데 이 아픔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본 도의 공식 질의에 대하여 달천댐 건설계획이 없음을 회신한 바 있고 또한 2001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댐건설 장기계획상 달천댐 건설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다시 2003년도에 달천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150만 도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 국은 대규모 댐 건설을 지양하고 수중보 또는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달천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즉각 달천댐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2. 정부는 달천댐 건설과 관련 150만 충북도민을 우롱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3. 국회는 달천댐 건설사업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라.

4. 정부는 기존 댐건설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피해를 보상하라.

2002. 10. 23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별지 6

대청댐 주변지역환경정비사업관련 건의문

【별지 6】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 관련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국회건설교통위원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걱정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댐 주변 지역 환경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전국 7개 주요 다목적댐의 유역면적 18,285km² 중 2개댐이 59%(10,782km²)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수조절 및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1980년에 건설한 대청댐은 청원·보은·옥천군 등 3개군 11개 읍·면, 65개 리·동에 2,652세대 17,247명의 수몰 이재민을 발생하게 하였고, 또 1985년에 완공된 충주댐은 충주시·제천시·단양군 등 3개 시·군 15개 읍·면, 114개 리·동에 7,105세대 38,663명의 수몰 이재민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수몰지역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였고 댐 주변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2중 3중의 법적 규제로 생업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또 심한 안개, 과습 등으로 농작물의 감수와 빈발되는 교통사고 등으로 많은 피해를 겪으면서 고달픈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청댐과 충주댐이 완공된 후 현재까지 댐 상류 주민들을 오염자로 몰아세우고 깨끗한 물을 달라는 목소리만 높았을 뿐 정작 이 지역주민들의 딱한 실정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문제는 소홀히 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외면한 2003년 9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 계획은 충청북도 150만 도민에게 경악과 개탄을 금할 길 없게 하였습니다.

명목은 댐 주변의 낙후된 시설과 경관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대청댐이 갖는 호수 및 수변 경관과 함께 댐 공원화를 추진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하겠다는서

① 대청댐 문화관을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1-5번지 내에 43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430평 규모로 건립하고

② 대청댐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69억원을 투자하여 「댐 좌안광장」 정비사업, 「댐체 및 저수지」 야간조명·음악분수, 「우안전망대」 정비, 기타 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계획에서 대국민 서비스 제고 운운하는 것은 대청댐 건설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류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댐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며 규탄의 대상이 되기를 자초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번 계획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는 우안 전망대의 경관조립, 주차장 보완, 장애인 램프사업 등 부대사업만 추진하고 주된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전체 「수몰면적」은 72.8km² 중 71% (51.67km²)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지역은 29%(21.13km²)에 불과하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총 700.67km² 중 충청북도가 90.8% (636.53km²), 대전지역이 9.2%(64.14km²), 수변구역은 총 185.33km² 중 충청북도가 99.1% (183.75km²), 대전지역이 0.9%(1.58km²)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총 179.484km² 중 충청북도가 56.4%(101.291km²), 대전지역이 43.6%(78.193km²) 등으로 대청댐 피해는 충청북도가 보고 있는데도 이

변 계획의 대부분을 대전광역시에 추진하려는 것은 150만 충북 도민들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충청북도 도민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을 즉각 중단·백지화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망대, 등산로, 주차장, 운동장, 광장, 농산물판매장, 생태공원, 물박물관 등 각종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 댐 주변지역인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에 안배하여

낙후된 충청북도의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대청호 수질을 한층 개선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가 올바른 선택을 하여 주기를 150만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3년 10월 24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별지 7

댐 관련 신문 보도 내용

중부매일

2002. 10. - 4

사설 季

달천댐 건설 여부를 앞두고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북도의 일관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것 같다.

지난 96년, 정부가 달천댐 건설을 계획했을때는 주민·환경단체 모두가 반대를 하여 일단 백지화라는 보증수표를 받아낸 바 있는데 몇년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주민의 민·민 갈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달천댐 기본 설계비 27억원을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괴산군내 불정·감물·장연면 등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은 「달천댐 건설 반대 괴산군 대책위」를 구성하여 반대 투쟁

나아가서는 가히 국가적인 일이다.

환경이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달천댐 건설 계획을 놓고 범도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충북도는 세미나를 열든, 주민 공청회를 열든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댐의 건설이란 주변 환경을 뒤비꿀만한 큰 역사(役事)다. 댐이 건설되면 충북도 남한강 수계의 환경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기존의 충주댐과 대청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종합적인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달천댐이 건설되면 괴산군은 지도에서

달천댐 대책 분명히 하길

에 나서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불정면 주민들로 구성된 달천댐 수몰 예정지 주민협의회는 최근 「달천댐 건설 추진위」를 구성하여 댐 조기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댐건설 반대 대책위는 댐이 건설될 경우 환경및 생태계의 파괴, 재산권 침해, 각종 행정 규제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건설 추진위는 수몰지로 알려진 뒤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런 경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실로 난감한 일이다. 우리는 어느 측이 됐던 해당주민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비록 소수의 견해라도 존중돼야 하고 재산상의 어떤 손실이 가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충주, 괴산, 음성 지역 일원 24km에 걸쳐 2억3천6백만㎡ 규모의 댐 건설은 몇몇 마을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수몰·수변구역및 충북도 전체의 과제요 더

없어지다시피 한다. 인구도 줄 것이 뻔하다. 이런 지리학적인 입장이나 산자수명한 괴산의 풍광및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괴산의 역사적 정체성 상실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충분한 학술연구와 여론 수렴을 거쳐 찬·반을 가린 연후 광역단체에서 그 대응논리를 세워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공청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정해진다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운함을 접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는 지역주민 모두가 반대하여 백지화됐으나 이번에는 민·민 갈등이 생겨 그 향방을 점치기 어렵게 됐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측에서는 댐건설 찬성측 의견에 탄력을 받아 밀어부칠 공산도 매우 크다고 본다. 부디 대승적 차원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충북도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 적당히 뒷짐을 지면서 이쪽 저쪽 눈치나 보는 것은 책임있는 지방행정이 아니다. **홍수**

중부매일

2002. 10. - 7

충북도의회 댐관련 특위 활동 관련기관 시책 추진 점검·현장 방문

충북도의회 댐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혁)는 7~10일 댐관련기관의 시책추진 사항을 듣고 현장방문 활동을 전개키로했다.

댐관련 특위의 활동은 댐과 관련해 충북도가 가지고있는 제반 문제 해결에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대처하기위한 것으로 댐관련 기관의 시책추진 상황과 댐주변 주민의 아픔과 애로를청취하고, 맑은물 공급에 문제점은 없는지,또한 댐과 관련한 우수 선진 시책 사례 등을 견학하고, 댐과 관련한 실상을 파악해 도정에 반영하게된다.

댐관련특위는 7~8일 댐관련 시책 청취와 대청댐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과 현지를 방문하고, 9일에는 경기도 양평군의 친환경농업 및 댐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시찰을 할 계획이다.

한편 댐관련 특위는 이번 활동 계획에 앞서 도에 댐과 관련한 30여건의 서면자료를 요청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달천댐,괴산댐재개발,용수전용댐 건설과 대청댐 취수탑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3 / 양승갑**

yangsk@jbnews.com

忠清日報

2002. 10. - 8

충북도의회 댐특위 가동 해결방안 모색 영향 관심

정부의 달천댐 건설 예산편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댐관련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댐관련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 댐관련대책특위(위원

장 정상혁의원)는 비회기중인 7일 간담회를 갖고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관련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특위는 대청·충주댐 준공후의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실태와 댐업무 관련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 달천댐 건설 추진상황, 댐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확인했다. **3**

/장선배기자

한빛일보

2002. 10. - 8

달천댐 건설 주민대립 조장

찬반 양론 분분 ... 지역정서 허물어

달천 댐 건설과 관련 해당수물에 정지영(토지 소유 외지인포함) 주민과 간접 피해주민들간 서로 엇갈린 주장으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 주민 모두는 한결같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대대손손 지켜온 고향 땅을 떠날 수 없다며 달천 댐 건설반대입장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도내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 등과 함께 그 추이를 지켜와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 건설 기본설계에 달천 댐을 포함시켜 추진중이라는 발표와 함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과 '올 것이 왔다'는 긍정적인 의견 등 상반된 입장이 돌출 돼 지역 정서마

져 허물어뜨리고 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주민들은 "수도권의 생활용수 확충방안에 왜 하필 과산군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대대손손 농사만 지어온 힘없는 농촌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정부는 달천 댐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1천900여명으로부터 댐 건설 찬성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아놓았다. 이들 주민들의 주장은 "댐 건설 발표 후 지역상권 붕괴, 토지매매가 어려움, 지역경제 낙후 등 주민 불이익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댐 사업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주 대책 등을 세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안정된 지역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 주민간 첨예한 대립 양상까지 진전된 달천 댐 건설과 관련 이 지역 주민들이 묵시적으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증평출장소가 증평군 설치를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최근 희망적인 반응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댐 건설이 추진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군 구조 특성상 존립 자체가 개 읍·면이 수몰될 경우가 우려되는 위기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과산 / 강영식기자

忠清日報

2002. 10. - 9

충북도의회 특위 가동

○...충북도의회 7대에 들어서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태.

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상혁의원)가 7일 회의를 열어 9일까지 대청·충주댐 일원과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댐으로 인한 문제점 파악에 나선것.

또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위(위원장 김정복)도 8일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 의회와의 연대와 도민 공감대 형성 등의 실천방안을 마련.

특히 7대의회 개원후 구성된 이들 두개 특위 위원들은 형식적인 활동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각오를 보여 기대를 갖게 하고 있는 것. **홍**

8 - 11 5005

보훈신문

忠清日報

2002. 10. 1 4

달천댐 건설되면 충주·음성·괴산 피해 예측불허

공공시설·문화재 물 속으로

잇계교 주변도로·괴담서원 등 수몰위기

정부의 방침대로 달천댐이 댐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는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일원에 건설되면 각종 대규모 공공시설 등이 수몰돼 막대한 혈세가 영구수장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충북의 '동강'이라고도 불릴만큼 경관이 빼어난 이 일대에는 많은 귀중한 문화재까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충주와 괴산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달천댐은 높이 59m, 길이 226m의 소규모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 향산리 잇계교 하

류쪽이 유력하다.

이들의 예측대로 댐이 이 일대에 조성될 경우, 충주시가 지난 1997부터 119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중인 잇계교와 접속도로(길이 2.4km, 폭 10m)는 모두 수몰되게 된다.

또 괴산군이 지난 1998~2000년 7월까지 괴산을 대덕리 일원에 16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공한 하수종말처리장도 수몰 위기에 놓일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일대에 위치한 충주광역수도 송수관은 물론, 괴담서원과 김시민 장군묘, 망화정, 수주팔봉 등 귀중한 지역문화재도 각종 시설 등과 함께 물 속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달천댐(댐 건설 예산 6816억원) 예상 담수면적은 22km²(총 저수량 2만 3600톤) 규모여서 충주와 음성, 괴산 등 3개 지역의 수몰피해는 실로 예측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댐이 건설될 위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면서 "댐 기본설계비가 내년 당초 정부예산에 반영되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괴산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댐이 건설될 지역은 댐이 가져다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면서 "특히 괴산지역은 이 때문에 군 존립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이원준기자

忠清日報

2002. 10. 1 4

한강·금강특별법 규제지역간 지원사업비 격차 커

주민 불만·민원 발생 우려

한강수계 700억 비해 금강수계 128억

지난 99년 한강특별법에 이어 올해부터 금강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규제대상 지역의 지원폭이 서로 달라 해당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똑같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도내 한강과 금강수계간은 물론, 다른 시·도와의 큰 지원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염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노출하게 될 전망이다.

충북도와 도의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강수계의 경우 지난 99년 충주시 양성과 가금면 등 5개면 20,558㎢(한강수계 전체의 11%)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으로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금강수계도 올해 특별법이 제정돼 보은군 2개면, 옥천군 8개 읍·면, 영동군 3개면 등 모두 373.19㎢(금강수계전체의 49%)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물 사용자들에게 톤당 11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수계지역별로 물이용부담금 확보액 등의 차이로 규제대상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사업비가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한강수계는 해마다 700억원 범위내에서 해당 시·군별 배정을 하고 있는 반면 금강수계는 128억원 범위내에서 수변구역 면적과 인구수,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지역 면적 등을 기준으로 배정하게 된다.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이 적은 금강수계는 한강수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사업비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규제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농업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로 충북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갖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따라 금강수계 상류지역 규제주민들의 예상되는 불만과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원액 차이를 보전하는 정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차원에서도 첨단농업 특화지역으로 삼고 있는 남부 3군에 대해 친환경농업 분야의 정책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규제지역 주민들이 불만없이 스스로 수질보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전체 재원 중 현재 8%에 불과한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생활개선에 투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충북도의회 정상현담특위장은 "담 상류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수계별 특별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농약과 비료를 덜 쓰는 등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와 시·군비 지원 확대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 /장선배기자

달천댐 기본설계비 전액 삭감

예산 27억원 수자원연구개발비로 전환

국회 건교위 예산심의 확정

건교부의 달천댐 건설 재추진과 관련 충주환경운동연합 및 사회단체는 물론 주민들이 달천댐건설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건교부가 요구한 달천댐 건설 기본설계비가 전액 삭감돼 달천댐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국회 건교위는 충북 출신 송광호 위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이 중 달천댐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안을 삭제하고 이 예산안에 계상된 27억원을 수자원연구개발비로 항목을 변경했다.

달천댐 건설문제는 건교부가 지난 99년부터 달천댐건설을 검토해 오던 중 충주·괴산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 및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지난 99년 달천댐 건설은 없다고 발표했고 건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건교부장관 직인을

찍어 댐 건설 장기화 계획에서 제외해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아 생업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해 피해와 관련 건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달천댐 기본설계비 27억원을 요구했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기본설계를 실시 댐위치의 규모, 개략공사비 산출, 용수분배계획 수립 및 홍수조절 능력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보상 자료수집, 주민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돼있는 등 달천댐 건설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충주환경운동연합과 충주·괴산주민들은 물론 시·군의회 등이 달천댐 건설 재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고 충북도 46개 민간 시민단체가 참여한 '달천댐건설 반대 충북도민회의'를 구성되는 등 충북도내 최대의 현안문제로 확산 급부상 했다.

송광호의원측은 "23일 열린 국회 건교위 소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달천댐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삭감키로 했고 아 예산을 타사업비로 사용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일선 충주환경운동연합실장은 "달천댐 건설과 관련, 국회건교위의 예산삭감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충북 전도민들이 이

번 결정에 대해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환경운동연합은 국회건교위의 이같은 심의 결과와 관련해 24일 충북 도민을 대표해 감사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충주/손근우 기자·김영재기자

“댐 건설 결사 반대”

도의회, 건의문 채택...임시회 폐회

충북도의회는 23일 달천댐 건설 계획철회 및 건설사업비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달천댐 반대건의문을 채택하고 제2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계획대로 달천댐을 건설한다면 24.2㎢가 수몰돼 충주시를 비롯해 괴산군 음성군 등 약 1천세대 5천명 이상의 이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게되고 특히 괴산군은 자치단체로서의 기반이 완전 붕괴될 처지라며 정부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치겠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도의회는 "정부의 홍수조절과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지난 80년 대청댐 완공에 이어 지난 89년 충주댐 완공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주

민이 발생,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거나 댐 주변지역으로 이주했다"며 "댐 건설당시 정부의 상미 및 약속을 받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 강화로 엄청난 재산권 제한과 생활의 불이익은 물론 안개농작물피해 등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특히 "지금까지 정부와 댐 관련 정책은 수몰이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2002년도 제2회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을 각각 처리했다. **한/김정원기자**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소극적'

용역비 집행못해 사장 위기 "문제해결 의지 부족" 지적

대청·충주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변화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기초 작업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충북도와 도의회는 피해대책 마련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태 조사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한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6대의회 때에 구성된 댐특위에서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의 피해를 다각도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에서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다.

올해 7대의회 들어서도 댐특위가 구성돼 대청·충주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지원책은 물론 다른 시·도의 실정을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피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댐건설 이후 20여년 경과된(대청댐 80년, 충주댐 85년 준공)후의 생태계 및 인문사회분야 변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피해조사가 우선돼야 하는데도 이런 작업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용역비를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도의회도 관련기관에 협의한 결과 종합적인 피해조사를 하려면 한개 댐당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답변

만 받아 놓고 있으며 도는 기상변화에 대한 농업 피해는 물론 생태계 교란, 각종 규제에 의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개발 손익 등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며 외면하고 있다.

6일 열린 도정질문에서도 정상혁 의원은 댐 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해 댐 피해연구조사 용역 실시를 촉구했다.

하지만 도는 "댐 주변지역 피해는 전국의 모든 댐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때 수자원공사와 공동용역에 대

한 실무협의를 중요하다"며 "댐특위에서 조사용역을 추진하면 용역결과에 의한 정부지원이나 제도개선 등은 집행부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갖가지 사유로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가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로 실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따라 중앙부처에서 스스로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실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도가 적극적인 조사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 / 장선배기자**

忠 清 日 報

2002. 11. - 7

중부매일

2002. 11. - 7

댐지역 주민 지원대책 논란

“관광 충북 활성화” 소극적 지적도

도정질의 이틀째

도정질의 2일째인 6일 충북도의회는 댐 피해 지역 주민 지원 대책과 관광 충북 활성화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의원(한나라당 보은2)은 『대청댐과 충주댐이 건설된 이후 현재까지 댐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도 자체의 특별 지원 시책이 거의 없어 이웃 대전시에서 댐 피해지역에 환경 기초시설 및 생활편의사업을 지원과, 경기 양평군의 경우 친환경농업을 집중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게 하는 경우와 대조가 된다』며 『수자원공사 등에 공식적인 보상을 요구할 근거 마련을 위한 댐 피해 연구조사 용역을 정부의 공인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가 있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이원종 지사는 답변을 통해 『최근 3년간 6백82억원을 지원받아 댐 상류지역의 환경보전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옥천군과 청원군 2개마을을 친환경 농업 거점마을로 육성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비도 대폭 늘려 댐규제 지역에는 일반 지역보다 비중을 높여 지원하고 남부 3개 군은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관광건설위 강

구성의원(한나라당 옥천1)은 청주공항은 활주로의 길이가 짧아 대형 비행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고, 최근에는 청주와 중국 심양간 노선도 폐쇄되는 등 활성화가 점점더 요원해지고있다고 지적하며 충북도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에 어떻게 대처하여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질의했다.

도 문화관광국장은 답변을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동남아 주요도시와의 중단거리 국제노선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적자 노선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과 중부권의 특화된 관광상품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공항접근 교통시설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지역의 관광관련 기초통계는 국내의 관광객들의 성향 파악과 관광패턴을 파악해 효과적인 관광자원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것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 통계를 월별, 관광객 수만을 집계하는 등 관광 충북 활성화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으며, 도 관광국장은 설문조사의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계절별 요소를 반영하여 조사 시기를 연 1회에서 연2회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다고 하며, 관광수입부문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관광 관련업체에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정보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수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양승갑

忠 清 日 報

2003. 6. 27

댐주변 규제지역 지원사업비 “피해주민 위해 쓰여져야”

충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발표

댐주변 규제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도 실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극히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두고 사업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27일 옥천군청에서 개최한 ‘대청댐 물 관리와 주변지역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정상혁특위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난 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간 청원·보은·옥천군에 지원된 69억 7000만원중 실제 소득증대사업에 투입된 지원금은 15.9%에 불과하고 나머지 84.

1%가 농로확포장 등의 사업에 쓰여졌다고 밝혔다.

또 금강특별법에 따라 수변구역지정후 시작된 2003년 지원사업비 227억중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을 포함해 74억원으로 32.6%에 그치고 있다. 지원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전체의 42%,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댐주변지역인 4개군 쌀 소득보전 친환경비료 지원과 친환경 농업지원 사업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했는데 댐규제지역의 농지가 대부분 밭으로 수해농가도 한정됐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위원장은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댐주변지원사업비 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즉흥적인 사업선정을 피하기 위해 댐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 사업 대상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으로 지원금

투입효과를 높여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외에도 금강유역환경청 김성동 국장의 ‘대청댐 상류 수질 오염실태’, 한국수자원공사 박성순 부장의 ‘대청댐 물관리와 주변지역 지원’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장선배기자

대청댐지역 주민 '규제 고통'

대청댐물관리 방안과 지원대책 심포지엄

주민 체감대책·친환경 관광개발 필요

중부매일

2003. 6. 2 8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대부분 물 이용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편중되어 댐 주변 주민들에게 별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지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두고, 각종 지원사업비 배분도 댐주변지역 주민의 실태에 근거하거나 지역 장래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가 대청댐 물관리와 주변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도의회 정상혁의원(충청북도의회 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청댐주변지역 규제와 지원의문제'주제 발표를 통해 보은 화남면 4개 리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의 수변구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등 3종의 규제를 받고 있고 청원 문의면 지역 대부분도 2종의 규제를 받아 영농 선택에 제한을 받는 등 농가 소득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일각에서 댐상류지역의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한 주민을 엄벌해야 대청댐물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된 생각이라며 '상류 규제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물을 출려 보내게 하려면 댐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생업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총지원사업비의 32%에 그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를 50% 선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대 박종호교수는 '대청댐주변 지역의 개발방향'주제 발표를 통해 대청댐 주변지역은 상수원수질보전 지역, 환경친화적 청정농업지역 및 호반형 전원관광지역 등으로서의 가치를 모두 제고시킬 수 있는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대청댐 주변 지역은 유리한 입지성, 뿌리깊은 정주성, 수려한 자연환경,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니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장점들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 바이오농업, 관광개발이 이 지역에 맞는 주요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대청댐 지역의 관광개발은 수려한 수자원을 보존 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매력을 지닐 수 있게하고, 수자원을 이용하는 갖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할수있도록 해야한다며, 시설 의존형 관광이 아니라 무형의 자원 중심형 관광이 되도록 해 지역의 문화가 관광의 주요 대상이 될수있는 문화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부매일 양승갑·정병상

충북일보

2003. 9. 29

△충주댐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오후1시30분 시청
대회의실

증부매일

2003. 9. 29

충주댐 지원사업 수준 미약

댐 주변구역 확대·실질적 지원 필요

정상혁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발표

충주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상 구역과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의회 주최로 열리는 '충주댐 주변 지역 발전방안 심포지움'에서 정상혁 충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댐 주변 지원구역을 댐의 홍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신약지대로 깊은 계곡이 많은 충주댐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 댐으로 실제 피해를 받는 댐 주변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제천시와 단양군은 충주호의 연간 계속되는 잦은 안개'로 인해 일조량 부족에 따른 각종

농작물의 개화결실과, 교통사고 발생, 생활불편 등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으나 주변지역 또는 특별대책 지역 등의 지정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다른 댐 주변 지역에 비해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충주댐의 연간 수입은 발전판매대금 400억원, 용수 판매대금 400억원 등 총 800억원 수준임에도 지난 10년간 충주, 제천, 단양 등 3개 시·군에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은 75억여원에 불과하다'며 '주민지원 사업비 출연 비율을 발전 판매수익금 현행 3%에서 10% 선으로, 용수판매수익금 현행 10%에서 20%선으로 인상해 댐주변지역 주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최근 37년간 내역을 보면 3개 시·군에 138개 사업 47억4천200만원 중 41.2%인 19억5천400여만원이 소득증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농로포장 등이 대부분'이라며 '댐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용도를 현행 비소득분야 중심에서 체계적인 지역발전계획에 의한 소득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주민지원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비와 지침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고 의견청취를 통해 주민들 다수의견을 존중하는 사업선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에 주민의 자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댐하류의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원에 치중되었으나 앞으로는 댐 상류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고 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중국의 경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에도 건전지나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유람선을 운용하며 규제보다는 댐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도 상수원인 비와 호에 농약사용금지조건으로 골프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충주댐 주변 지역 주민들도 의견을 모아 정부와 지자체에 좋은 대안을 건의하고 스스로 물을 깨끗이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익규

중부매일

2003. 9. 3 0



소백의 협곡을 감돌아 가며 맑은 물과 아름다운 풍광을 한반도의 중심부이다. 그러론은 남한강은 막혀 있다. 충주댐은 올해로 조성된지 20년이 된다. 수물지구 신흥민의 이름은 아직도 옛날 상처로 남아 있으며 댐 주변에 살고 있는 불박이 농민들도 이런 저런 규제에 묶여 생활상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댐이 조성되면 꿈의 관광코스가 열리고 관광소득이 증대될 것이라는 환상이 깨진지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반대급부나 규제완화 정도는 있을법한데 이도 시원치 않다.

환경은 공유하는 것이다. 공기와 더불어 물은 자연이 인간에게 배운 최대의 공유물이다. 그 공유물의 혜택이 아주 똑같기는 어렵겠으나 어느정도 비슷한 선은 유지해야 한다.

댐의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균형감각을 잃으면서 한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혜택을 입고 다른 쪽에서는 희생만 강요당한다는 것은 아주 모순된 처사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 상류주민도, 하류주민도 다 같은 국민이다.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지역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소수의 상류주민들이 무시되어서도 안된다. 청정한 물을 제공하는 지역에서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원액은 쥐꼬리인데 뉘치닥꺼리는 끝이 없을 정도다. 제천시청에서

충주댐 주민 지원사업 확대를

열린 충주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정상혁 충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 지적했듯 댐 주변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 주민소득 증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첫번째로 지적한 댐 주변 지원구역을 댐의 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한 조치에 대한 비합리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풍야지대라면 이러한 논리가 맞겠으나 남한강 상류는 소백의 협곡서 부터 가는 물줄기를 모아 큰 강을 형성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산악지대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자체부터가 무리가 있다.

그다음으로 지원금의 책정과 배분문제를 아니 따질 수 없다. 주재발표에서 밝혔듯 충주댐의 연간 수입은 발전판매대금 400억원, 용수판매대금 400억원 등 80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충주, 제천, 단양 등 3개 시·군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지원금은 75억여원에 불과하다.

이 통계로 보면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은 그저 생색내기엔 불과하다. 이런 불합리성을 바로 잡으려면 주민지원사업비 출연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발전판매수익금 현행 3%에서 10% 선으로, 용수판매수익금 10%에서 20% 선으로 책정해야 균형감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원사업의 용도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농로포장 일변도에서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강구해 볼 일이다. 물값 줄다리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물공급 지역에 사는 주민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수혜자측이 한발 양보했으면 한다.

댐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박탈감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이상한 물 관리사업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제2절 신행정수도건설지원 특별위원회

1. 신행정수도건설추진현황
2. 특별위원회 구성
3. 주요활동상황
4. 주요성과와 기대효과
5. 참고자료

제2절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1.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현황

가. 사업개요

- 면적 : 2,300만평
- 수용인구 : 50만명(2030년 기준)
 - ※ 저밀도의 쾌적한 생태·정보도시(인구밀도 300명/ha)
- 이전대상 : 청와대,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
- 소요재원 : 45.6조원(정부 11.2, 민간 34.4)
 - ※ 토지매입 4.6, 도시교통기반조성 12.9, 건축비 28.1

나. 추진일정

- 준비단계(2003년말) : 도시구상, 입지선정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 2004. 1. 16
 - 입지선정(2004) : 현지조사 검증, 공청회후 최종입지 선정
- 계획단계(2004~2007) : 입지확정 용지매입 건설계획 수립
- 건설단계(2007~2011) : 기반시설 및 도시건설, 공공청사 신축
- 이전단계(2012이후) : 중앙행정기관 단계적 이전, 주민입주 개시

2. 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배경

21세기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인구·정치·경제 및 각종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의 시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조기 이행시키기 위함.

나. 구성개요

- 구성일자 : 2003. 3. 19(제210회 임시회)
 -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 분리구성 :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2003.5.29)

※ 명칭변경 :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2004. 5.27)

○ 구성인원 : 10인

- 위원장 : 김정복 의원, 간 사 : 강우신 의원

- 위 원 : 강구성 의원, 박재국 의원, 박종갑 의원, 송은섭 의원, 이기동 의원, 정윤숙 의원, 조계숙 의원, 최재욱 의원

○ 활동기간 : 2003. 3. 19 ~ 2004. 6. 30까지

3. 주요 활동상황

○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명칭변경 및
위원 변경 선임(제210회 임시회 - 2003.3.19)

- 당 초 :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 변 경 :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 이광종위원 사직처리, 강구성위원 선임

○ 특별위원회 1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3. 3. 19(수) 13: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별위원회위원 10명

- 주요내용 : 향후 활동방향 논의

○ 신행정수도건설 충청권 광역의회간 합의서명

- 일 시 : 2003. 4. 14(월) 11: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의장실

- 참 석 : 3개시·도의회의장 등

- 주요내용

· 신행정수도 건설지원 공조 합의 및 서명

· 3개시도 행정수도 이전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합의

○ 특별위원회 2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3. 4. 16(수) 11:00
- 장 소 : 의회 2층 회의실
- 참 석 : 의회의장, 특위위원 10명, 범도민협의회 대표 11명
- 주요내용 :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대통령공약사업 이행차원에서
조기 확행 촉구 등 향후 활동방향과 공조방안 논의

○ 신행정수도및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분리구성

- 일 시(제213회 임시회) : 2003. 5. 29(목)
- 특위명칭변경 :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 행정수도이전지원 충청권광역의회 제1차협의회(창립총회)

- 일 시 : 2003. 5. 30(금) 11:00
- 장 소 : 청주관광호텔
- 참 석 : 3개시·도의회의장, 특위위원 30명, 기타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구성 및 협의서명
 -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하기로 합의

○ 행정수도이전지원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제1차 실행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3. 6. 10(화) 11:00
-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 참 석 : 3개시·도의회 특위위원장 및 간사 6명
- 주요내용 : 행정수도이전 촉구건의문(안) 협의

○ 행정수도이전지원 충청권광역의회 협의회 제2차 협의회 개최

- 일 시 : 2003. 6. 23(월) 11:00
-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 참 석 : 3개시·도의회의장, 특위위원 30명, 기타 관계관, 기자
- 주요내용 :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 행정수도건설 추진 범충북인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03. 6. 23(월) 19:00
- 장 소 : 서울 코엑스컨벤션센터
- 참 석 : 특위위원 10명, 집행부관계관, 범도민협의회 회원, 재경충북인사 등 500여명
- 주요내용 :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 범충북인 수도권 결의대회

○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참석(신행정수도기획단)

- 일 시 : 2003. 7. 22(화) 14:00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 참 석 : 특위위원 10명, 집행부관계관, 범도민협의회 회원 등
- 주요내용 :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 행정수도이전지원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제2차 실행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3. 8. 12(화) 11:00
- 장 소 : 충남 부여
- 참 석 : 3개시도의회 특위위원장 및 간사 6명
- 주요내용 : 차기활동계획 협의
- 충청권 국회의원 및 중앙 관계관 초청간담회 개최 합의
- 일시 및 장소 : 2003. 9. 15. 18:00, 여의도 인근 식당
- ⇒ 특별조치법 국회통과 협조요청

○ 충청권 국회의원초청 간담회 개최 (광역의회 3차협의회)

- 일 정 : 2003. 9. 15(월) 12:00~14:00,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충청권 국회의원 17명 (충북의원 6명 참석)
- 시·도의회의장, 특위위원장 및 간사, 사무처장, 관계관 등
- 주 최 :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 주요내용
- “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금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건의

- 행정수도특별조치법 정기회 상정 관련 국회동향 청취
- ⇒ 행정수도 “충청권국회의원협의체” 구성 합의

○ 특별위원회 제3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3. 9. 25(목) 13:00~14: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10명, 기획관리실장 및 집행부 관계관
- 주요내용
 -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경위 및 결과 보고
 - 행정수도충청권이전관련 추진상황 청취 및 현안사항 논의

○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 관련 충청권협의회 참석

- 일 시 : 2003. 10. 7(화) 17:30
- 장 소 : 청주관광호텔
- 참 석
 - 충청권 3개시도 지사·의회의장, 특위위원장, 충청권 국회의원(홍재형, 윤경식, 신경식)
 -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부단장, 협력관 2명
 - 시장군수협의회장, 시군의회협의회장, 시민단체 임원 등
- 주 관 : 충북범도민협의회 등 충청권 민간단체
- 주요내용 : 특별조치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전략 협의
 - 공동합의문 서명 및 발표 (합의문 별첨)

○ 특별위원회 제4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3. 11. 11(화) 13: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기획관리실장, 기타 관계관
- 주요내용 : 행정수도이전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현안사항 논의

○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 일 시 : 2003. 11. 18(화) 15:00
- 장 소 : 서울 여의도공원
- 참 석 : 10,000여명(시민사회단체)
 - 국 회 : 자치분권국민운동 등 8개 단체
- ※ 충 북 : 1,520명(도의회40, 도공무원120, 시군1,120, 시민단체240)
- 주 관 : 지방분권국민운동

○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구성안” 부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 및 규탄성명서 발표

- 일 시 : 2003. 11. 22(토) 11:00
- 장 소 : 의회 기자실
- 참 석 : 국회의장, 특위위원장, 청주시의원
- 주요내용 :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 구성 부결에 따른 규탄 성명서 발표

○ 충청권광역의회 제3차 실행위원회 개최 및 규탄 결의식

- 일 시 : 2003. 11. 25(화) 15:00
- 장 소 : 충청북도의회 의장실, 의원휴게실
- 참 석 : 충청권 3개시·도 실행위원 6, 충북도의회의원 27
- 주요내용
 -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구성안’부결 규탄성명서 발표
 - 삭발 결의식 : 3시·도 특위위원장(대전 임현성, 충북 김정복, 충남 임상전), 충남 간사(홍표근)
 - 규탄혈서 : 강구성의원
 - 규탄성명서, 삭발 머리카락, 보도내용 및 사진 등 관련자료
⇒ 국회의장, 국회 건교위원장, 4당대표 등에게 송부

○ 특별위원회 제5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3. 11. 28(금) 16:00
- 장 소 : 의회 의장실

- 참 석 : 의장, 특위위원, 관계관
- 주요내용 :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구성안” 부결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 충청권 3개광역 시도 의회의원 공동 국회 또는 청와대 시위

○ 특별조치법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과

- 일 시 : 2003. 12. 8(월) 14:00
- 장 소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장(김정복), 간사(강우신), 전문위원 등
- 주요내용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방청

※ 의결결과 : 국회건교위원 15명중 찬성 12, 반대 2, 기권1

○ 특별위원회 제6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3. 12. 15(월) 13: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집행부 관계관
- 주요내용

- ‘신행정수도의건성을위한특별조치법’ 본회의 통과 전망
및 국회동향 청취
- ‘신행정수도의건성을위한특별조치법’ 본회의 방청 방안 논의
- 특별법 부결시 대응방안 논의

○ 2003. 12. 29 :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일 시 : 2003. 12. 29(월) 16:02 (공포 : 2004. 1. 16)
- 장 소 : 국회 본회의장
- 참 석 : 특위위원장(김정복), 간사(강우신), 전문위원 본회의 방청
- 의결결과 : 재적의원 271명, 출석의원 194명
 - 찬성 167(86.0%), 반대 13(6.7%), 기권 14(7.3%)

○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축하리셉션 참석

- 일 시 : 2003. 12. 30(화) 11:30
- 장 소 : 도청 대회의실
- 참 석 : 도단위 주요기관장, 도의원 및 관계관, 시군의회의장
- ※ 축 사 : 부의장(박재국)

○ 특별위원회 제7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4. 4. 27(화) 13: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8, 집행부 관계관
- 주요내용
 -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추진상황보고 청취
 -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논의

○ 충청권광역협의회 제4차 실행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4. 5. 10(월) 11:00~13:30
- 장 소 : 충남 연기군 서면 용암리(별천지식당)
- 참 석 : 실행위원(대전·충북·충남특위위원장, 간사) 5명,
전문위원 등 6명
- 주 관 : 충남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위(위원장 임상전)
- 주요내용
 - 수도권지자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움직임에 대한 입장 논의
 - 충청권 광역협의회의 향후 활동방안 등 협의

○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 일 시 : 2004. 5. 27(목) 11:00
- 장 소 : 특위회의실
- 참 석 : 특위위원 6명
- 주요내용
 - 특위활동상황 중간보고

- 특위 명칭변경 :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 충청권 광역협의회 제5차 실행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4. 6. 9(수) 11:00
- 장 소 : 금수장(청원군 현도면 소재)
- 참 석 : 실행위원(대전·충북·충남특위위원장, 간사) 5명, 전문위원 등 6명
- 주요내용
 - 신행정 관련 활동상황 및 동향 청취
 - 충청권 광역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합의(6.14 충남도의회)

○ 충청권 광역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 일 시 : 2004. 6. 14(월) 14:00
- 장 소 : 충남도의회 의장실
- 참 석 : 3 시도 의장, 특위위원장·간사 등 9명, 직원 8명
- 주요내용 :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규탄성명서” 발표

○ 충청권 광역협의회 한나라당 대표 면담

- 일 시 : 2004. 6. 28(월) 14:30
- 장 소 : 한나라당 대표실
- 참 석 : 18명
 - 박근혜대표 외2명
 - 3시·도 의장, 특위위원장·간사 등 시·도별 각5명
- 주요내용
 - 한나라당 입장 설명
 - 충청권 광역의회 성명서 및 의견 전달

4. 주요성과와 기대효과

○ 충청인 모두의 땀과 눈물의 결실

- 2003.12.29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2명중 194명 참석,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로 압도적 표차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통과

○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의 공조체제 구축

- 충북·대전·충남 3개시도 광역의회 협의체 구성(2003.5.30)
 - 이해관계 초월한 소지역주의 극복 및 공동 대응방안 모색
-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2003.6.23)
 -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회의장, 3당대표, 충청권 국회의원 등
- 특별조치법 국회통과 촉구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개최
 - 이해관계 및 당파초월, 3당 협의체 구성 공동대응 합의 도출(2003.9.15)

○ 삭발결의대회·상경집회·국회방문 등 대정부 및 정치권 활동에 의한 쾌거

- 신행정수도 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 성명서 발표(2003.11.22)
 - 국회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 설치안 부결에 따른 강경대응
 - 대국민호소,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행정수도 건설 촉구 건의
- 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삭발 및 규탄식(2003.11.25)
 - 정치권에 대한 강경대응 일환 삭발식 및 규탄 성명 발표
- 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통과 건의를 위한 국회방문(2회)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 마련

- 충청권만이 누릴수 있는 소인적 발상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국토 상생과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대승적 도약의 길 마련
- 과도한 중앙집중과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
 - 특히 지방분권 가속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5. 참고자료

-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충청권 광역의회간 공조에 관한 합의문
(2003. 4.14 충청권 3개시도 광역의회)
- 신행정수도 충청권 유치를 위한 충청권 발전협의회 공동성명서
(2003. 4. 충청권발전협의회)
-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협의서
(2003. 5.30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촉구 공동건의문
(2003. 6.23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위원일동)
- 신행정수도 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성명서
(2003.11.22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 신행정수도특별법 부결에 따른 규탄성명서
(2003.12.30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충청권행정협의회 공동합의문
(2004. 2. 4 충청권행정협의회)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충청권공동합의문
(2004. 2. 충청권발전협의회)
- 신행정수도 이전반대 규탄 공동성명서
(2004. 6.14 충청권광역협의회)
- 행정수도 충청권건설 파급효과
-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行政首都 移轉支援을 위한 「忠淸圈 廣域議會議長」 共同합의문

우리 대전·충북·충남 3개 시도 광역의회의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충청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수도의 충청권 조기이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역량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분권 실현의 가장 적절한 방안임을 천명하면서, 일부 반대움직임을 경계하고 정부의 차질없는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2. 우리 충청권 3개 시도의회는 500만 충청인의 대의기관으로서 참여정부의 「新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공동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3.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관련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충청권 이전의 당위성을 확산시키고 이와 관련된 부작용 예방활동 전개와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4. 우리 충청권 3개 시도 광역의회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의회내에 「행정수도충청권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충청권광역의회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200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은 규 _____

충청북도의회의장 유 주 열 _____

충청남도의회의장 이 복 구 _____

신행정수도 충청권유치를 위한 충청권발전협의회 공동성명서

대전, 충북, 충남 3개시도 대표로 구성된 충청권발전협의회 회원 모두는 충청권의 공동발전과 함께 우리 충청권이 21C 국운융성을 위한 중추적 융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신행정수도충청권건설공약'이 수도권 과밀과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포화상태를 넘어선 수도권의 집중화, 과밀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여 상생의 발전과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2.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와 지역별 유치경쟁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 강구와 함께 이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확고한 실행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3. 충청권 3개 시·도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타당성과 국토 중심부의 공동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4. 충청권발전협의회회원 모두는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의 당위성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500만 충청권 주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며 범 충청권 차원의 협력을 다한다.

우리 충청권 발전협의회 회원들은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국민통합과 전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회원 모두의 뜻을 밝힌다.

2003. 4.

충청권발전협의회

行政首都移轉支援忠淸圈廣域議會協議書

제1조 (목적)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광역의회간 상호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 광역의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의회 차원의 공동 지원방안 강구
2. 충청권 주민의 대의기관인 협의회에 속한 광역의회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확인 및 대정부 건의
3.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 및 긍정적 여론형성
4.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공약과 관련한 지역주의와 각종 부작용 예방활동 전개 등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광역사도 의회의 특별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충청북도의회·충청남도의회 행정수도충청권이전지원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한다.

제4조 (회장 임무 등) ①회장은 회의소집과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 회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회의는 제9조에서 정한 실행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 광역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 할 수 있다.

②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전일까지 통지한다.

제6조 (회의장소) 회의는 충청도의회,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 순으로 윤번제로 개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의결)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합의안건의 효력) 협의회에서 합의된 안건은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협의회와 광역의회간 협의서 체결 등 상호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실행위원회) ①협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실행위원회는 협의회와 광역의회내 설치된 행정수도충청권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상호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실행위원회는 협의회와 협의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광역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광역의회간 협의에 의해 분담한다.

제11조 (협의서개정 등) 본협의서를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와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본 협의서는 광역의회의 의장 및 특위위원장이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3년 5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은 규 _____

“특별위원회위원장 임 헌 성 _____

충청북도의회의장 유 주 열 _____

“특별위원회위원장 김 정 복 _____

충청남도의회의장 이 복 구 _____

“특별위원회위원장 임 상 전 _____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촉구 공동건의문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12대과제중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천계획중의 하나인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 하겠다는 계획은 충청권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전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대사업임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충청권 500만 지역주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특정 지역 차원의 문제를 떠나 수도권 의 과밀과 비대화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만연된 폐해와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정부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추진일정이 대선공약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금년 중에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소모적인 국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이전 예정지를 반드시 확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국회, 청와대 및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해당지역으로 이전되어야 국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행정수도로서의 새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넷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지역이기주의나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다섯째, 선진국가로의 도약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수도충청권이전특별법」을 급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의결되도록 건의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웅대한 미래를 여는 행정수도의 이전은 미국이 뉴욕을 경제수도, 워싱턴을 행정수도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인 흐름이며, 21세기 지식정보화·디지털로 대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수도권은 자원과 창의 속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고,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대통령 임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500만 충청민들의 여망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3. 6. 23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위원일동

대전광역시의회회장 이은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헌성

충청북도의회회장 최길재,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정환

충청남도의회회장 이복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상권

신행정수도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성명서

우리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여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이 2003. 11.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하여 150만 도민과 더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지방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낙후와 피해를 가져옴으로써 자생력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는 참담한 실정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의원을 비롯한 일부 영남권 국회의원들은 터무니 없게도 수도권에 대한 지역 이기적·역차별 논리만을 앞세워 지방이 야 쓰러지건 말건 이에 동조하여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충청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여야 4당 원내총무가 합의하였음에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것은 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하루속히 당론을 확정하여 특별법 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만일,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여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충청권 지방의회 의원들은 결연한 의지로 탈당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심각히 고려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천명한다.

셋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충청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충청인 모두가 한마음 되어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넷째, 수도권과 일부 정치권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국가 장래를 위한 냉철한 판단과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150만 도민의 결집된 힘으로 끝까지 행동할 것이며, 집단간·지역간 이기주의적 대립과 갈등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1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2003. 11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신행정수도특별법 부결에 따른 규탄성명서

비효율적인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 참여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이 2003. 12.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하여 150만 도민과 더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지방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낙후와 피해를 가져옴으로써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어 자생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참담한 실정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소극적인 추진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영남권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논리와 지역적 이기주의에 의하여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이 부결된데 대하여 분노와 함께 150만 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이 노무현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참여정부의 국정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하여 현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추진 방안과 일정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이 지방의 생사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당리당략에 연연하여 특별법안을 부결한 정치권의 표리부동한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전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으로 임한 정당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넷째, 우리 150만 충청도민은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될 때까지 충청인의 의지와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임을 천명한다.

2003년 12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忠淸圈行政協議會 共同合意文

우리 충청권 3 시장·도지사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 16 제정·공포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이와 같은 결실을 거둔 데에는 그 동안 우리 3시·도가 소지역주의적 유치 경쟁을 자제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는 등

지난 해 합의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관한 공조약속」의 성실한 이행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조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로드 맵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상호 협조할 것을 재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정부의 계획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체계 정비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1. 우리는 정부가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지역간 과열된 유치경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후보지 공개방법 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충청권 상생도약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등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우리는 입지 선정과 관련한 「충청권 공조의 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론주도 계층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언론과 시민단체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1. 우리는 앞으로도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나가면서, 신행정수도의 건설기대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등 저해요인을 해소하는데 공동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2월 4 일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忠淸 圈 共同 合意 文

우리 충청권은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신행정수도건설」의 이행 추진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 협력하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되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 문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제 등 많은 장애요인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500만 충청인의 결속과 단결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충청인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3개 시도지역간의 공조정신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우리는 정부가 올해 안에 완료기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수립, 입지선정, 예정지 고시 등의 과업들이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및 비교·평가 등 입지확정에 관한 제반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함으로써 지역갈등이 조장되거나 국민통합을 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어디에 결정되더라도 충청권의 공동 번영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을 합의한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의 입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충청권 공조」를 깨뜨리는 어떠한 언행과 활동도 과감히 배척하며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상호협조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단기적 매매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가로막는 반시대적 부정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500만 충청인 모두가 감시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정부가 정한 계획일정에 따라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면서,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2월 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도지사	심 대 평	시 장	염 홍 철	도지사	이 원 종
의 장	이 복 구	의 장	이 은 규	의 장	권 영 관
회 장	최 석 원	회 장	이 광 진	회 장	신 방 응
회 원	김 용 웅	회 원	김 주 일	회 원	이 태 호
회 원	조 춘 자	회 원	양 승 희	회 원	김 명 자
회 원	오 제 직	회 원	강 용 식	회 원	이 태 일
회 원	홍 재 복	회 원	손 재 익	회 원	조 수 종
회 원	이 재 우	회 원	이 시 찬	회 원	이 상 록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움직임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 그리고 관련단체에 드리는 우리의 입장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 제1조에는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 일부 시민사회단체 및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표면화 되면서 급기야는 헌법소원 제기와 국민투표 운운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열과 상사(相死)의 길로 획책하는 안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는 500만 충청인과 더불어 이미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일관성 있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국회, 정부 그리고 관련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적근거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둘째, 현재의 수도권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와 산업 그리고 정부의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되면서 심각한 교통난과 주택난, 환경오염과 물류비용 증가 등 막대한 국력 낭비가 폭증하고 있는 반면, 우리 대다수 국민의 고향인 지방은 갈수록 피폐하면서 자생력마저 상실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더 이

상의 어리석은 평지풍파적 행동을 자제하고 살기 좋은 우리조국을 후세에 길이 물려줄 수 있는 대역사에 다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셋째, 행정수도이전은 이미 70년대에 정부차원에서 일극집중(一極集中)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구상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며 정부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기관·단체 그리고 사업체에 대하여 성의 있고 설득력 있는 대책 강구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산·조성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넷째, 수도권 일부 시민단체 및 자치단체와 특정 정치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법적 사항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와 국민투표 실시 등 국민갈등 및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이 서로 상생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04. 6. 14.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전특별위원회위원장

충청북도의회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충청남도의회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수도 충청권건설 파급효과

(자료 : 신행정수도연구단)

☞ 시나리오 1 : 중앙행정기관, 일부소속기관 공무원 1만 7천여명 이전

☞ 시나리오 2 : 정부출연연구소, 투자기관까지 공무원 5만여명 이전

○ 충청권 인구 및 고용증가 효과

연 도	고 용 (명)		인 구 (명)	
	시나리오 1	시나리오2	시나리오 1	시나리오2
2020	61,932	200,432	282,344	913,755
2030	82,792	267,940	482,498	1,561,518

○ 수도권 인구 및 고용감소 효과

연 도	고 용 (명)		인 구 (명)	
	시나리오 1	시나리오2	시나리오 1	시나리오2
2020	48,581	155,787	221,931	713,350
2030	63,809	205,069	378,801	1,221,032

○ 신행정수도 건설의 국가지역경제성장효과(단위:조원)

구 분	2007-2010	2011-2015	2016-2020	합 계
전 국	25.81-32.10	9.74-15.13	6.57-6.86	47.81-48.40
수 도 권	9.91-12.37	1.90-4.25	1.07-1.19	15.34-15.35
중 부 권	5.41- 6.64	5.26-5.92	3.85-3.90	5.24-15.75
영호남권	10.49-13.09	2.58-4.96	1.65-1.77	17.22-17.32

※ 인구분산이나 경제효과 등은 행정수도 이전시 공무원과 그 가족이 모두 이사하고, 관련 산업도 상당부분 이전하거나 현지 창업하는 것 등을 전제로 한 것임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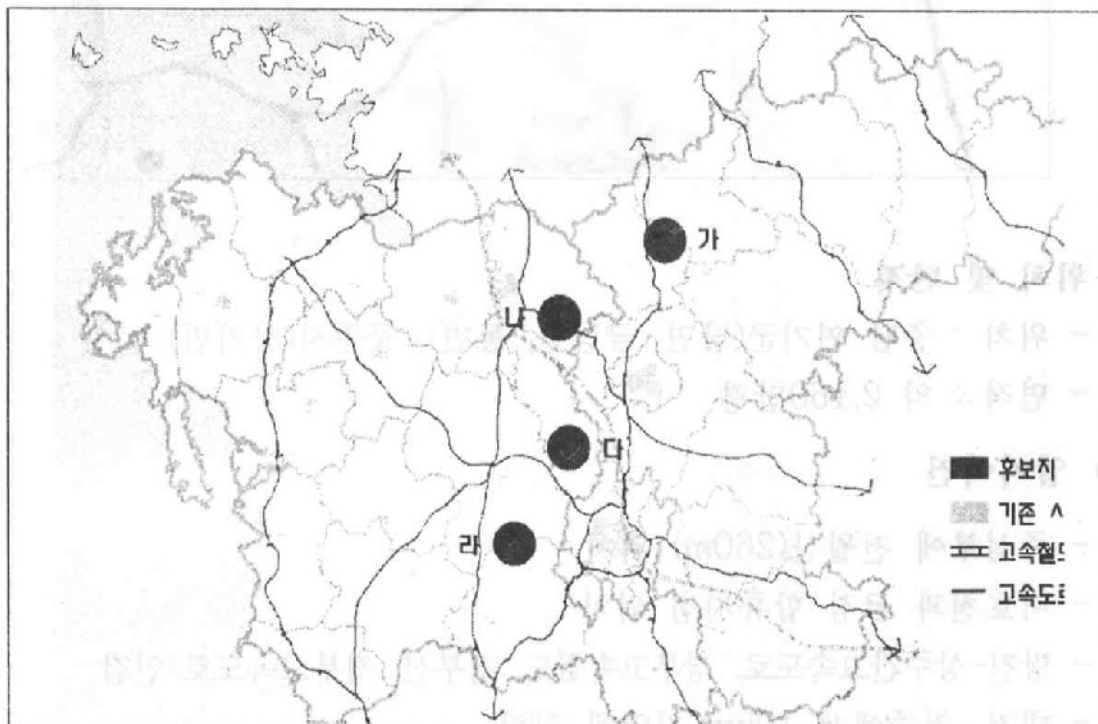
□ 평가 개요

- 기 간 : '04. 6. 21(월) ~ 6. 26(토) 6일간 합숙평가
- 장 소 :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대전소재)
- 평가위원회 : 권용우 위원장 및 평가위원 79명 등 총 80명 참가

□ 4개 후보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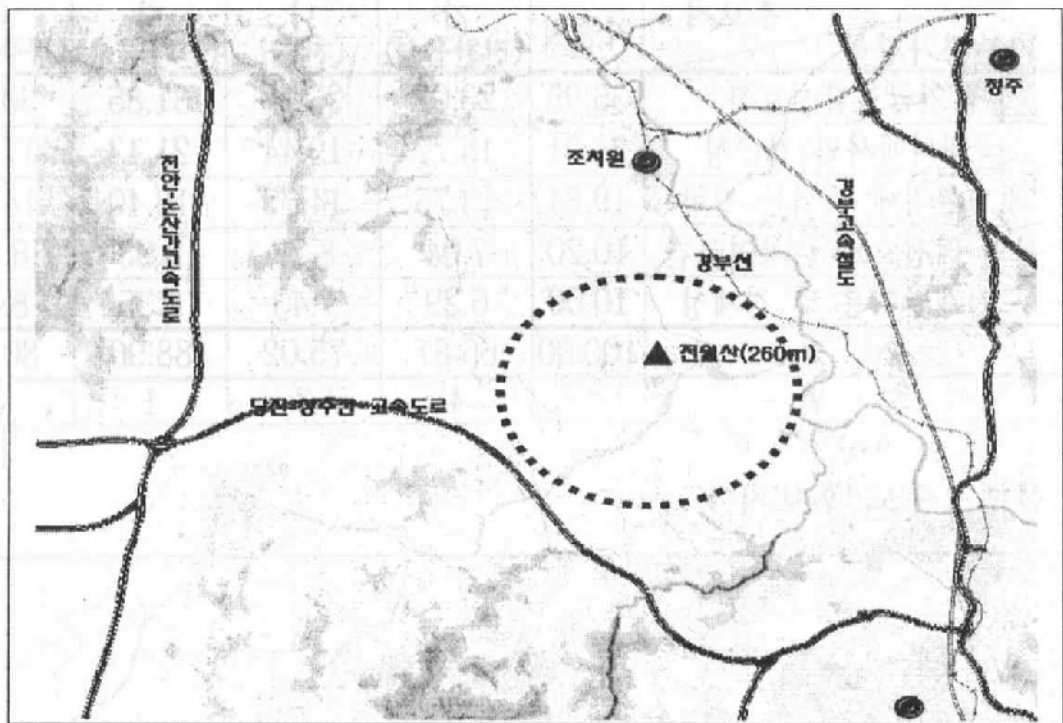
후보지 기본평가항목	가중치	가 (진천음성)	나 (천안)	다 (연가공주)	라 (공주논산)
국가균형발전효과	35.95	23.02	25.18	31.85	30.62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24.01	16.77	19.44	21.43	17.99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19.84	13.75	14.75	18.40	14.78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10.20	7.04	8.22	8.93	8.10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10.00	6.29	7.43	8.35	8.88
총 점	100.00	66.87	75.02	88.96	80.37
순 위		4	3	1	2

< 신행정수도 후보지 >



< 충남 연기·공주지역 >

-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등의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음
- 특히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및 청주공항에 인접하고, 당진-상주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전·충북·충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균형발전효과 뿐 아니라 국민 통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장기면) 일원
- 면적 : 약 2,160만평

■ 입지여건

- 중심부에 전월산(260m) 위치
- 미호천과 금강 합류지점 위치
- 당진-상주간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인접
- 대전, 청주에서 10km 지역에 위치

□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후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중 최종입지를 확정하고 '04. 12월 예정지역 등을 지정·고시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개발행위 등의 허가가 제한됨
- 따라서 8월중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입지가 사실상 확정되면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나머지 지역은 행위제한 만료기한인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할 계획임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요청지역은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결정함
- ※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km안의 읍면동을 포함하되,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의 면적이 당해 읍면동 전체면적의 10%미만인 읍면동은 제외

< 규제사항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04.12.31까지 ⇒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타 후보지는 해제 계획

구분	제한지역(읍·면·동)	후보지
(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맹동면, 삼성면, 원남면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광혜원면, 덕산면, 이월면, 초평면 등 11개 지역	진천 덕산, 음성 대소, 맹동 일원

(나)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동면, 병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풍세면, 구룡동, 구성동, 삼룡동, 유량동, 청당동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전동면, 전의면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 등 17개 지역	천안 성남·목천·수신·북일원
(다)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남면, 동면, 서면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강외면, 부용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룡동, 금고동, 금탄동, 대동, 둔곡동, 신동 등 17개 지역	연기 남·금남·공주·장기·일원
(라)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반포면, 이인면, 탄천면, 태봉동, 오곡동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연산면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두마면 등 12개 지역	공주 계룡·논산·상월·일원

□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시·군 중에서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30%(1.77%)를 초과하는 지역(천안, 연기, 청원)이 포함되어 있는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2개 읍, 21개 면, 11개 동」 지역에 대하여는

구분	토지거래특례지역(읍·면·동)	비 고
(나)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동면, 병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풍세면, 구룡동, 구성동, 삼룡동, 유량동, 청당동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전동면, 전의면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	1개 읍 11개 면 5개 동
(다)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남면, 동면, 서면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강외면, 부용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룡동, 금고동, 금탄동, 대동, 둔곡동, 신동	1개 읍 10개 면 6개 동

- 추진위원회에서 토지거래특례지역을 지정하여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하였음

※ 천안(5.21%), 연기(5.84%), 청원(2.54%)

※ 지정효과 :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확대
농지 1,000㎡초과, 임야 2,000㎡초과, 기타 500㎡초과 200㎡초과

제3절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 구성
2. 그 동안 추진사항
3. 향후추진계획
4. 참고자료

제3절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목적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법의 바람직한 방향정립과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역혁신 발전계획 및 지방분권 세부계획 수립시 반영시키기 위함

나. 구성개요

- 구성일자 : 2004. 2. 10
- 운영기간 : 2004. 2. 10~제7대 충청북도의회 임기 말까지
- 구성인원 : 11인
 - 위원장 : 김정복 의원, 간사 : 조계숙 의원
 - 위 원 : 강구성의원, 강우신의원, 박재국의원, 박종갑의원, 심홍섭의원, 오장세의원, 이대원의원, 이필용의원, 정운숙의원

다. 구성경위

- 2004. 1.16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2004. 1.16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2004. 2.10 :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2. 그 동안 추진사항

- 2004. 4.26 : 특위 1차 회의(제226회 임시회)
 - 추진상황 보고, 운영계획 수립
- 2004. 6.18 : 특위 1차 간담회(제229회 임시회)
 - 추진상황 보고, 현안사항 논의

3. 향후 추진계획

-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도의회 역량 강화
- 자치적 분권화, 협동적 분권화, 공생적 분권화를 위한 전략 방안 마련 추진
-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금융, 정보 등 중추관리기능의 지방 분산 노력
- 자치조직권, 인사권 보장의 조기 실현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 교육자치의 확대와 지방경찰제 도입을 위한 연구방안 모색
- 지방선거제도 개선 지속 추진

4. 참고자료

地方分權 및 國家均衡發展推進 特別委員會 運營計劃

- 2004. 1. 16 국회에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 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중앙정부 통제하의 획일화된 행정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됨
- 그러나 법 통과만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자동적으로 보장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전국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본 계획은 특위가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활동방향과 우리도의 논리를 개발하여 지방의 침체문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등을 해소시킴으로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지방자치 역량을 조기에 실현시키고자 함.

I. 地方의 現實態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집중 계속

- 인구 : 35%('80) → 46.3%(2000년)
- GRDP : 45.1%('85) → 47.2%(2000년)
- 제조업체수 : 43.8%('80) → 55.6%(1999년)

※ 외국의 인구집중도 : 동경 32.8%, 파리 18.2%, 런던 21.6%

-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산업 공동화 심화

- 인구추이 : 57.1%(90년) → 53.7%(2000년) △3.4%

- 수도권에 주요기관 집중

- 공공기관 84%, 30대기업 본사 88.5%, 명문대학 80%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추진미흡

- 이양사무 대부분 비권력적, 기능적 업무에 치우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도권으로의 이주현상 심화

- 교육, 경제, 생활편리, 문화적 혜택 등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 극심

- 서울 95.3%, 경기 70.1%, 도지역 28.3%에 불과

- 지방도시의 고령화 현상 심각

- 지방에는 공장, 본사는 서울에 대부분 위치

- 기업 납부 세금, 자금은 거의 서울로 흡수

- 지방의회의 위상 약화

- 지방의회의 권한과 그 권한의 실질적 행사에 한계

- 법령상 의결권 행사범위 협소, 행정통제기능 미약, 지방 예산심의 기능 제한 등

- 지방의회의원의 자질 향상 필요

- 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부족으로 집행부와의 갈등초래

- 지방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 및 상근, 유급제로 전환, 집행 기관 견제 강화와 무보수 명예직 한계 극복 필요

- 기초 부단체장의 국가직 공무원화로 시장군수인사 전횡방지 필요

- 동시선거로 인한 지방의회에 무관심 초래
 - 도지사, 시장군수 동시선거로 인해 지방의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개연성이 높음
- 지방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의 자율운영권 미흡
 - 각 지자체에 대한 기구, 정원을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통제
 - 의회사무처 기구개선 및 의회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미확보

II. 地方分權 및 國家均衡發展推進特委 構成·運營

- 구성(2004. 2. 10) : 11인
 - 위원장(1) : 김정복
 - 간 사(1) : 조계숙
 - 위 원(9) : 이필용, 오장세, 이대원, 박재국, 박종갑, 정윤숙, 심홍섭, 강구성, 강우신
- 운영기간 : 2004. 2월 ~ 제7대의원 임기만료시까지
- 주요기능
 -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올바른 집행 및 우리도의 논리 개발
 - 광역시도 의회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상호 발전토대 구축
 - 도민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반영
 - 기타 주요현안, 정책, 제도 등 연구·검토

III. 運營方向

-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도의회 역량 강화
- 자치적 분권화, 협동적 분권화, 공생적 분권화를 위한 전략방안 마련, 추진
-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금융, 정보 등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노력
- 자치 조직권, 인사권 보장의 조기 실현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 교육자치의 확대와 지방경찰제 도입을 위한 연구방안 모색

□ 지방선거제도개선 지속 추진

IV. 細部 運營計劃

① 생산적인 지방의회 위상 정립

○ 조례제정 대상사무(자치사무)의 확대 노력

-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행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단체위임 사무는 최대한 자치사무로, 기관위임사무중 지방적 성격의 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하여 지방의회 관여대상사무의 범위 확대

○ 의원 보좌인력 보장 및 기능강화

- 의안심사의 전문성, 능률성 추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 효율화를 위해 입법보좌관제 도입, 운영
- 집행기관 간부보다 격하된 사무처장, 담당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 견제와 균형 유지

○ 의회 자주, 자율 조직권 확대 추진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83조) 규정하였음에도 자치단체의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주조직권 제약 규정 개정(지방자치법제103조)

○ 사무처 직원 전문성 제고

- 업무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잦은 전보 지양을 위한 일정기간 (2-3년) 전보제한제도 실시
- 의회 사무직원의 교육강화 -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 지방의원의 유급제 조기 실현 노력

- 사회 급속한 변화에 따른 복잡화, 전문화 추세에 맞춰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유급화로 법규 개정 추진

○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동시선거로 인한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 해소 노력

- 동시선거에 따른 유권자의 관심이 자치단체장에게 쏠려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한 무관심 개연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추진

② 지방재정 확충 노력

- 자치단체가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자체수입으로 충당치 못하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 이에 따른 자율성 침해로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 곤란
- 특히, 자치단체 관할 구역내 자원에 대해 과세할 수 밖에 없는 세원의 차이가 커,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적 불균형 항상 존재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자치단체 상호간 존재하는 재정 수평적 불균형 해소 노력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모색

※ 지방교부세 범정을 단계적 상향조정 적극 요구

③ 지방분권 내실화를 위한 과제발굴 추진 노력

- 분산적 분권화 분야
 -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관리기능을 지방으로 과감히 분산시켜 수도권 과밀요인 완화 및 지방발전기회부여 노력 필요
- 특화적 분권화 분야
 - 지방별, 지역별, 특화산업을 통하여 지방고유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역량 강화, 기술혁신 시스템 발굴 구축
- 자치적 분권화 분야
 - 지방재정력 확대 : 국세인 부가가치세, 유흥음식세 등 일부를 지방에 이양
 - 재정운용 자율권 부여 : 국고보조사업의 지나친 세분화 지양
 - 단체장의 조직관리권 강화 :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억제
- 협동·공생적 분권화 분야
 - 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 협력과 제휴활동 강화
 - 상호 배타적, 대립적 관계지양, 공동이익추구 노력
 - Win-Win 형태의 공동발전, 상호간 네트워크 차원의 연계발전 모색

④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추진

- 현재 경찰법제2조(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에 따라 경찰권을 국가가 독점
- 지방경찰청은 동법제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명령, 지휘, 감독권은 없음

※ 충북의 지방경찰관서(2001년) - 경찰청 1, 경찰서 10, 지파출소 128

- 앞으로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단계적 도입 실현 노력
 - 세계적 추세인 국가, 자치제의 절충형태가 바람직
 - 자치단체의 경찰부담금제도 도입 검토
 - 시군단계까지 자치제로 확대 등

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와의 발전적 관계 재정립 검토

- 현행 교육자치제는 광역자치단체에 한해 적용돼 지역의 특수한 교육수요 반영이 어려우며
- 교육, 학예에 관련 사무는 시도교육감이 관장, 단체장은 완전 배제되어
 - 학교부지확보, 학교급식제공,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가 적극 책정치 못하는 원인임
- 특히,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교육행정기관, 학교사무에 대한 의결·감사권을 별도로 갖고있어 업무중복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따라서 교육정책결정에 주민참여를 본질로한 교육행정 실시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관계의 재정립(두단체간 완전분리, 독립적관계유지, 두단체간 중첩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포괄 등) 방안 연구·검토 필요

제4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 구성
2. 그 동안 추진사항
3. 참고자료

제4절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목적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과제중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역 유치를 위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도민역량을 결집하고 의회·유치위 등 각급 기관단체간 공조체제를 유지,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유치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함

나. 구성개요

- 구성일자 : 2002. 9. 9
- 운영기간 : 2002. 9. 9 ~ 오송 분기역 유치시까지
- 위 원 : 10명
 - 위원장 : 김정복 의원
 - 간 사 : 강우신 의원
 - 위 원 : 박재국·박종갑·강구성·송은섭·최재옥·이기동
조계숙·정운숙의원

나. 구성경위

- 1993. 8. : 호남고속철도건설계획 발표
- 1995. 10. 11 : 오송분기역 설치 건의안 채택
- 1999. 12. 27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심의 확정
 - 호남고속철도 노선도면 천안 분기 표기
- ※ 교통개발연구원(용역수행기관) : 천안→익산→목포 노선안 제시
- 2000. 1. 10 : 국무총리공관 방문(의회, 도, 민간단체 등)

- 국무총리(김종필)께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오송이나 천안 등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바 없음을 관보에 부기 천명
- 2001. 5. 26 : 건교부, 제3의 기관에 별도 용역 결정
 - 국회의원 95명 서명(2001.5.3) 용역기관 선정 철회 결의안 서명
- 2002. 7. 25 : 대한교통학회에서도 오류범함
 - 2차 중간발표시 천안분기역으로 결정할 의도로 수서-향남-천안까지 복복선 건설안을 또다시 제시하는 오류 범함
- 2002. 8. 2 : 임인택 건교부장관 복복선 단호히 부정

2. 그 동안 추진사항

- 2002. 7. 30 : 오송분기역 유치 건의문 발송(대통령 등 4개 기관)
- 2002. 9. 9 : 특위구성(위원장 : 김정복 의원, 간사 : 강우신의 원 선임)
- 2002. 10. 8 : 집행부(교통과) 간담회
 - 그동안 추진상황 보고 청취, 활동계획 협의
- 2002. 10. 26 : 분기역 유치를 위한 대 토론회
 - 추진상황 보고, 단체별 활동방향 부여, 결의문 채택 등
- 2002. 11. 13 : 강원도 의회와 공조 추진대회
 - 오송분기역 타당성 설명, 공조추진 적극협력
- 2003. 7. 4 : 호남고속철도건설 용역 공청회 참석
 - 우리 도 참석자들 문제제기, 강력 항의로 무산
- 2003. 7. 22 : 호남고속철도 용역관련 성명서 발표
- 2003. 8. 7 : 호남고속철도 용역관련 건설교통부장관 면담

3. 참고자료

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회건설교통위원장님,
국무총리님, 건설교통부장관님 !

21세기 국가의 선진 도약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혼신을 다하시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7.25 호남고속철도건설 2차용역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지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신뢰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3용역기관 선정 요구 등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주장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는 충북선과 연계되어 강원남부·경북 북부로 이어져 동서간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기존의 경부선 철도와 충북선·태백선이 X자 형으로 구축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과 국민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송기점역을 설치할 경우 대전·충북·강원·경북 등 이용권역이 크게 확대되어 승객 수요가 천안노선에 비해 1일 6천명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권에 있어서는 정부대전청사, 3군본부, 대덕연구단지, 국립묘지를 비롯하여 충북권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공군사관학교, 내륙화물기지 등 중부권에 위치한 주요 국가시설의 이용과 활용도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지역적인 열망에도 불구하고 전 노선의 신설을 전제로 사업비 등을 내세워 우리 오송기점역이불리한 것으로 부각시키는 이번 중간 용역결과 발표에 대해 우리 150만 충청도민은 크게 동요함은 물론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운행 가능 시기인 2020년에는 1일 최대이용객이 71천명~95천명으로 기존 경부고속철도 노선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경부고속철도가 포화되는 시점조차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 ~ 목포간 전구간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전 노선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무리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서 충청도민을 비롯한 대전·강원·경북 등 중부권 지역 주민들은 기존 경부고속철도 노선 활용과 더불어 철도망체계의 효율성, 경제성, 지역균형개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오송기점역 설치가 최적의 대안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중간 연구결과 사항에 대한 확실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백년대계를 위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연구용역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과 국익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2. 7. 30

충청북도의회의장

나. 호남고속철도 용역관련 성명서

우리 150만 충청도민은 최근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전반적으로 한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오면서 신뢰할 수 없는 용역기관 선정과 공정성이 결여된 용역 중간연구결과를 통하여 불신을 자초하여 왔다.

이에 우리 150만 충청도민은 장기간 인력·시간·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을 추진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투쟁하여 왔다.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익 차원에서 정치적 논리나 특정 지역에 편향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때마다 정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 선정과 용역업무를 이행하겠다고 수차 천명해 왔다.

더욱이 최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분기역 설치의 신 행정수도 입지와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정부입장을 수용하고 충청권이 함께 공조하면서 지역분쟁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 4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공청회 자료가 오류와 하자 투성이고 각종 지표조사가 누락되거나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편중되는 등 정부나 용역기관 스스로 공신력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청회 무산은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우리 150만 충청도민은 공정성이 상실된 용역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혀두고자 한다.

I. 정부는 엉터리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연구진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I. 정부는 정치적 의도나 밀실용역을 중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이 이행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I. 정부는 외국에도 유래가 없고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복복선 설치계획이 지역편중 의도가 아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I.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국익을 고려하여 양심을 갖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이 진행되도록 보장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I. 정부에서는 분기역 문제는 행정수도 입지와 연계하여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함은 물론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용역을 위해 원점에서 재조사를 촉구한다.

I.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150만 충청도민과 함께 총궐기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3. 7. 22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